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인쇄/1999년 7월 3일

발행/1999년 7월 6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최의철

편집인/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1 팩시밀리 901-2541

© 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72-9

5,500원

학술회의 총서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

통일연구원 창립8주년 기념
제29차 국내학술대회

통일연구원

○본 자료는 1999년 2월 26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통일연구원 창립8주년 기념 제29차 국내학술회의 회의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통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축 사

우선 진심으로 이 모임을 축하합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를 어떻게 냉전구조에서 해방시키느냐가 우리의 남북문제의 근본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다른 것은 다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모이는 학술회의는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이 착상에 진심으로 찬성하고 이 자리에서 하는 논의들이 실제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은 20세기와 21세기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0세기는 분열과 대립과 갈등구도였습니다. 초기에는 식민지와 제국주의 사이의 갈등, 그 이후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사이의 냉전과, 그로 인한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전망할 때 21세기에는 화해구도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치적, 경제적,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공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0세기의 제일 나쁜 유산이 남아있는 곳이 지구위의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한국사람으로서 이 대결구도를 화해구도로 바꾸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21세기 이후에는 세계사에서 탈락해 버리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아직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마지막에 미국은 승리하는 나라가 될지 몰라도 남북은 모두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전까지 늘 얘기해온 “오래되지 않아서 무너진다. 그래서 무너지면 흡수를 하자.” 혹은 연착

륙(soft landing)과 같은 얘기는 북한의 정체를 바로 보지 못한데서 나온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다면 이러한 대결구도를 화해구도·공존구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 막고 있는 냉전구도를 깨뜨리고 여기에서 해방되지 않는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동북아시아, 동양문화권으로 세계의 중심이 이동하는데 동북아시아는 대륙권과 해양권으로 대립되게 될 것입니다. 대륙권은 중국이고 해양권은 일본이 될 것인데 이같은 대립구도가 생긴다면 한반도의 역할은 무엇이나라는 것입니다. 북은 대륙을 지지하고 남은 해양을 지지한다면 한반도가 이런 역사속에서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진정한 화해를 하고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만드는 데 주력할 수 있고, 그것은 세계평화를 달성하는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대중대통령의 선거공약 가운데서 가장 감명 깊었고 기대했던 것이 취임후 1년 이내에 남북간의 구도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냉전구도를 해체하는데 필요한 첫 번째는 북한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좋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해대상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똑바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항상 우리입장에서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오셨던 전 독일수상인 헬무트 슈미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분단국가인 한국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통일을 하기까지의 첫째 전략이 동독에서 원하는 것은 다 주었다고 합니다. 때때로 자존심 때문에 안 받겠다고 하면 소련에 주어서 익명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 이산가족문제 등을 해결해나갔는데, 한국에서는 정치계에서 무슨말을 하긴 하는데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두터운 보수세력에게 오해를 많이 안 받을 방법이 있는가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을때에는 과거의 보수적 성향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개방적인 것이겠지만 북한사람들은 어떻게 들느냐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습우화에 나오는 햇볕정책은 외투를 벗기는 것인데, 그 사회주의의 외투를 벗기자라는 말로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짓을 하고 돌아온 사람을 포용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햇볕정책, 포용정책이라는 용어를 화해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화해하자고 하는데, 남쪽과 북쪽이 다를것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통일고문회의의장으로 있을 때, 강조했던 것입니다. 비료를 달라고 하면 주고난 다음에 이산가족 문제는 적십자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비료를 달라고 하니 상호주의라는 괴상한 문구를 내놓고, 이것을 안하면 안준다고 하는데 이같은 방식을 가지고서는 제가 아는 북한을 다룰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주장은 여러분들이 오늘 토론하면서 거세게 비판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하는데 전제조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다고 하고 북한 사람들은 통일을 하되 우리식 사회주의를 토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20세기의 낡은 유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우리의 5천년 역사에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20세기의 대결구도 시대에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사회주의일 뿐입니다. 우리의 태극기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우리의 역사는 음과 양의 대립이 아닌 조화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21세기 역사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왜 20세기의 역사를 자꾸 계승할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결구도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현상유지세력입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통일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체제, 생각,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이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20세기 이후에 한반도의 역사가 세계사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나가느냐 아니면 아주 없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도 포함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반드시 해체하고자 하는, 반드시 같은 민족으로 21세기의 역사를 마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지식인들과 시민들의 세력이 커져야 합니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오해를 안 받으려고 하다보면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냉전구도 해체는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할 일은 하되 국민과 국민사이의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학자는 학자대로,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어떻게든 북한에 있는 시민들과 연계하여 해빙작용이 와

야 뒤에 정치적인 통일이 되어도 후유증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의 교류를 갖는 것이 절실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붙잡지 못하면 끝나버리고 만다는 절박하고 절실한 기회(Kairos)를 마주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모든 일의 최우선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정부, 학자, 시민, 종교계가 모두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과 길잡이를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 2. 26

대통령 통일고문회의 의장

장 원 통

개 회 사

존경하는 강원통 대통령 통일고문회의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학술회의의 사회를 맡아주실 임용순 교수님과 주제발표를 해주실 전·현직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인 길정우 박사님과 허문영 박사님, 그리고 토론에 참가해 주실 학계의 이재정 총장님과 이호재 교수님, 박상섭 교수님, 김동성 교수님, 언론계의 김삼웅 주필님, 국가안보회의의 최강 박사님! 귀한 시간 내시어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통일연구원이 「국민의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의 장기·포괄적 접근전략 모색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는 지난 1년간 통일의교안보분야에서 긍정과 부정적 요인들이 교차하는 중에도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운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1년의 족적을 뒤돌아 보는 가운데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고 긍정적 요인을 확대해 나가면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본격적인 전략구상과 전개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는 필요가 아닌 당위의 과제입니다.

이는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호응해야 하고 주변 이웃들이 협력해 주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반도의 냉전축쇄를 푸는 일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적 지혜와 에너지를 모으고 북한과 이웃 나라들을 설득, 동참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부터 냉전적 사고와 제도·관행들을 청산해 나가면서, 동시에 대결과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과 공존의 정상관계로 전환해야 하며, 이웃들과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노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호주권을 존중하고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길을 제도화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민족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과제야말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룩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길에는 우리가 넘어야 할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들지만 이산들을 기어이 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야말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짊어져야 할 명예로운 짐이요, 동시에 확실한 통일준비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토론모임에서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어떤 산이며, 또 이 산들을 어떻게 넘어야 할 것이가를 놓고 진지하고 귀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 2. 26

통일연구원 원장

양 영 식

I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방안: 포괄적 논의를 위한 시론

길 정 우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겸 칼럼니스트)

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논의: 왜 필요한가?

이제까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둘러싼 관심이 현실정책으로 구현화됐던 것은 80년대 말 우리 정부의 북방정책(北方政策)을 그 시발점으로 잡을 수 있다.

부연 설명이 필요없이 구소련의 붕괴를 시작으로 한 세계적 차원의 냉전 종식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긍정적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둘러 평양에 접근하려던 당시 우리 정부의 외교노력은 애초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의 고립(孤立)을 촉발했으며 대남관계에서 긍정적 호응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을 수반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두고 김영삼정부 초기 대북관계 개선에 주력했던 한완상(韓完相) 통일부총리는 북방정책의 예기치 않았던 결과라고 안타까워 했다.

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1)

물론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이 북한을 평화적 공존(共存)상대로 인식하고 포용정책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共同體) 구현을 위한 의도에서 출발했던 것인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유럽에서의 냉전구조 해체가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심각한 전략적 구상을 갖고 추진됐는지 역시 의문이다.

그러나 과거 북한의 동맹국이었던 구소련과 중국과의 수교(修交)를 통해 북방정책의 일차적 성공을 거두었던 한국이 대북관계에서 내실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흔히 얘기하듯 김영삼 정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대북정책 탓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기존의 우방관계에 결정적 타격을 받은 북한이 체제존립을 위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93년 3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로 이어지는 극단(極端)조치를 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정책입지를 좁혀놓았다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해석이 타당할 듯 싶다.

북방정책을 거론하는 이유는 당시 냉전구조의 한 축(軸)을 차지하던 구소련과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심각한 고려나 의지와 상관없이 냉전구조의 이완(弛緩)을 도모한 결과를 낳았지만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던 까닭에 냉전구조에 의미있는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던데 반해 현 정부가 한반도 냉전구조의 희생물인 남북한간에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냉전구조 해체를 도모하려는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현 정부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구조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기본여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아울러 88년 노태우정부의 「7.7 특별선언」에서 밝힌 바 우리의 우방국들과 북한간의 관계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신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위 교차승인(交叉承認)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불

때 북방정책의 의미를 현 시점에서 재음미할 명분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 냉전구조 해체를 생각해 볼 필요성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반세기 지속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 가능성을 따져보기 전에 왜 현시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 안보정세의 구조적 변화라는 큰 그림에 손대기에 앞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냉전구조 해체 논의를 촉발한 문제들을 우선 살펴 보도록 하자.

첫째,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현 정부의 긍정적 평가가 대북 관계의 성격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냉전구조 해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또 북한은 변화가 가능한 체제인가? 등을 둘러싸고 학계 뿐아니라 관련국 정부안에서도 논란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현 정부의 소위 안보팀은 북한의 변화조짐이 뚜렷하며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대북 포용정책이 점차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¹⁾

따라서 포용정책을 통한 북한의 지속적 변화를 보장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냉전구조 해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미사일 위협 등으로 촉발된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안별로 대응하는 단편적(斷片的) 해법으로는

1)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1월26일부터 29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미측 인사들을 두루 만난 자리에서 지난 일년간 북한의 개방 움직임을 구체적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2월1일부터 한주일간 워싱턴을 찾은 국회사절단도 미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같은 논리를 구사했다. 다만 이들을 만나 본 미측인사들은 한국이 남북 교류, 협력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미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 확보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미측인사들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 호응이 없을 경우 대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Ⅰ)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현 정부의 판단인 듯 싶다. 다시말해 ‘나무보다 숲을 보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안보 열세(劣勢)에서 시작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냉전구조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북한이 느끼는 안보위협을 해소해야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셋째, 지난날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의 큰 틀안에서 (특히 핵문제가 대두된 이후) 전개돼 온 한국의 대북정책이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판단과 미국 일변도의 대북해법이 한반도 장래를 설계하는 한국의 구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회의(懷疑)가 현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로버트 갈루치 대사를 비롯한 군축(軍縮)전문가들이 주도했던 대북 핵협상 결과 94년 북미 기본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동결(凍結)을 성취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내에서 조차 북미 기본합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독자적인 해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의식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미국의 입장만을 중시할 경우 문제의 근원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는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현재 북한을 다루는 미측의 정책구상이 미국 자체내에서 도전받고 있으며 뾰족한 해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해법 모색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김대중정부의 포괄적 안보구상과 의지가 남북관계에서의 돌파구 마련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란 문제에 심각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으며 같은 맥락에서 냉전구조 해체 문제에 주목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했다고 할 수 있다.

취임초 방미와 방중, 그리고 방일에 이어 러시아 순방도 계획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냉전구조 해체에 중요한 역할을 행사할 주변4국에 대한 김대중정부의 외교적 관심을 읽을 수 있다.

더욱이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 결여란 부정적 인상을 주변국들에 줌으로써 대외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했던 까닭에 한반도 안보구도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킬만한 여지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나 현 정부는 적어도 지난 일년간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우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여부를 떠나) 정책의 신뢰성 만큼은 얻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더해 다소 소극적인 해석일는지 몰라도 주변국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장래에 대해 한국의 경우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름대로 한반도 안보구도 변화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 정부 나름대로의 포괄적 안보구상을 촉구한 점도 무시할 수 없을 듯 싶다.

미·일 양국이 숙고하고 있는 구상에는 우선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양국간 협조체제 강구, 북한의 군사적 위협 억지를 위한 전역마사일 방어체제(TMD) 공동개발 및 대중국 정책 조율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장기적인 과제로 주한미군의 位相과 역할 조정,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상호연계성 검토 등이 포함돼 있다.

사실 이 모든 주제가 동북아지역내 한반도의 안보구도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상정한 것인 만큼 당사국인 한국이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당연하다.

그리고 현 시점에 한국내 이같은 논의를 가능케 한 배경에는 김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언급해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을 안도시킨 점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진력한 점 등이 작용하고 있다.²⁾

6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Ⅰ)

아울러 앞서 언급한 내용과 다소 중복되긴 하지만 김대중정부의 안보팀이 강조하는 '주인의식(主人意識)'과 함께 도처에서 발견되는 용미론적(用美論的) 시각의 배합은 남북관계 뿐아니라 한반도 냉전구조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케 한다.

요약컨대 대북관계 현안에 대한 장기적 해법 모색,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조짐, 김대중정부의 심각한 정책의지와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지향한 정책논의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냉전구조 해체: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에 따라 안보구조가 좌우됐던 냉전구조 변화 혹은 해체가 한국의 경우에 갖는 의미는 다분히 중층적(重層的)이다.

첫째, 대외관계 차원에서 보면 주변4국과의 외교 및 안보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성격변화를 보이게 된다는 뜻이다. 한미 안보동맹의 파기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재규정됨에 따라 한미관계 역시 기존의 일방적 안보의존 상황에 변화가 수

-
- 2) 김대중대통령은 당선직후부터 “통일이후에도 적정수준의 미군주둔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해 왔으며 작년 6월초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미의회 합동연설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해 전폭적인 지지를 도출해 낸 바 있다. 한국의 생각과 상관없이 미측은 주한미군이 한미 안보동맹의 상징적 기반이라 간주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주한미군이 (통일)한국의 독자적 안보구상에 일정한 제어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다 노골적으로 말해 일본은 주한미군이 존속하는 한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이나 위협적인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내에서도 주한미군의 존재가 역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한일간 마찰 여지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1월22일 필자와의 오랜 대화에서 윌리엄 오덤 전 국가안보위원회(NSA) 위원장도 같은 입장을 조심스럽게 피력한 바 있다.

반될 수밖에 없다.

둘째로 대북관계 또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의 성격변화를 촉발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냉전구조 해체 노력이 대북관계의 변화를 동반할 것이란 예측이 적절할 듯하다. 아무튼 선후(先後)가 엇갈리며 나타날 남북관계의 변화를 예상해야 한다.

셋째, 한국사회 내부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 단정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한반도 안보정세를 규정하는 안보구도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한국사회 안에서 보는 우리 자신의 시각 또한 영향받게 될 것이다. 뒤집어 말해 우리 사회내부의 의식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한국을 둘러싼 냉전시대 안보구도가 해체되고 평화구도가 정착되는 데 불필요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같이 중층적 의미를 갖는 냉전구조 해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냉전구조 해체가 대미 안보의존 탈피를 뜻하는 것이라는 단선적(單線的) 사고만으로는 「냉전구조 해체→한반도 평화구조 정착→한민족 공영체 건설→민주적 통일국가 실현→세계속에 정당한 몫을 행사하는 단일국가 형성」이란 도식(圖式)의 완결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반세기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북한을 상대하며 한민족 공멸(共滅)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근원적인 문제인 냉전구조 해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만 해도 큰 발전이라 하겠지만 해체과정에서 구사할 냉철한 전략과 가용(可用) 자원, 치를 대가 및 해체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가 병행되지 않은 자기충족적인 주장은 수사학(修辭學)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준비안된 냉전구조 해체 주장은 오히려 한반도의 불안과 한민족의 장래에 힘겨운

명예를 더해줄 여지마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냉전구조 해체가 갖는 복합적 의미를 바탕으로 정책의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은 무엇인가?

가. 북한의 장래(將來)

우선 북한의 장래를 과연 우리 의지대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기왕의 대북관계를 돌이켜 보면 이에 대한 답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북한의 장래를 우리 뜻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구태여 냉전구조 해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가능할 지 모른다.

또한 북한의 장래를 움직인다는 발상 자체가 남북공존을 지향하는 현정부의 대북정책과 배치되는 구태의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적어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냉전구조 해체 혹은 성격 변화란 당면 과제를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 봐야 할 사안이다. 게다가 주변국의 대북정책이 예외없이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정(假定)에 기초해 구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라고 이를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의지는 차치하고 라도 북한체제의 장래 혹은 북한정권의 미래에 관한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적어도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의 심각한 동요를 예상했던 이들은 이제와서 북한이 상당기간 이력 저력 유지될(muddle through) 것이란 예측에 공감하고 있다.³⁾

3)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입장은 특히 94년 북미 기본합의 체결 과정에서 미측 협상자들 간에 팽배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기본합의의 정치적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분위기에서 북한체제의 조기붕괴를 역설하는 목소리는 거의 듣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냉전구조 해체란 다분히 정책적 의지가 담긴 우리 구상이 주변국 설득에 더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북한체제의 장래에 대한 예측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장래에 대해 (단순히 자기충족적 예언이 아니라) 현실에 근거한 우리의 판단이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한편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북한 체제의 존속과 남북간 평화적 공존이라 할지라도 이에 집착하면서 북한체제가 직면할 또 다른 상황, 소위 급변사태(急變事態)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 뿐아니라 현실적 상황 대응에도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킬 우려가 있다.

나아가 현 정부가 북한체제 인정에 바탕한 남북공존을 대북정책의 기조(基調)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국에선 여전히 한국의 진의(眞意)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다시말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한국주도의 통일인가 아니면 통일의 기회를 의식적으로 외면하며(?) 평화구조 정착에 집착한 채 시간과의 싸움을 벌일 것인가에(즉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는 논리)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나. 북측 의도 분석에 바탕해 현안에 대한 해법 논리 정립

적어도 현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과 논리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북미 기본합의와 이후 미정부의 대북정책에 깔린 가정을 '북한체제의 조기 붕괴'와 "시간은 우리편에 있다"는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현재 북한의 핵개발 동결에 대한 의혹과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역량을 확인한 상황에서 두 가정 모두 도전받고 있는 실정이다.

10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1)

김대중대통령이 작년 12월 7일 미정부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이나 임동원 수석이 1월 말 워싱턴을 방문해 미측인사들을 상대로 설파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

아울러 임수석은 지난 10일 경실련 통일협회 창립 5주년 초청강연회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그 내용을 밝혔다.

문제는 대북현안을 단편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의 근원적 원인인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직까지 우방국들에 확산되고 있질 못하다는데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정부의 논리에 공감하지 못해서라기 보다 지하의혹 시설에 대한 사찰과 미사일 위협 대처방안 모색 등 당장 닥친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포괄적이고 장기적 대안에 대해 미국 혹은 일본내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정치적 현실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현안에 대한 단기적 해법마련에 적극 참여하되 그 내용이 우리가 구상하는 장기적 냉전구조 해체 구상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주변국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대북해법의 출발점인 북한의 의도 및 행태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분석에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

즉 북측의 의도분석과 이에 따른 우리측 대응법이 조화를 이뤄야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냉전구조 해체구상에 대한 주변국 및 국내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현재 미국과 일본 등을 향해 촉구하고 있는 대북 관계개선 및 수교(修交) 주장이 그 밑에 깔린 논리와 상황판단이나 미일양국의 국내정치적 입장 및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맞아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

즉 북미 및 북일관계 개선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정한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구조적으로 옳을지 몰라도 미일 양국

이 우리 생각처럼 발빠르게 움직여 주지 않는다 해서 한국이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독자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전개되고 있는 현실은 (적어도 워싱턴에서 느끼는 한국정부의 움직임은) 한국이 주변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들의 입장에 크게 상관치 않고 대북관계 개선에 이미 적극 나서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말해 한국정부의 움직임과 우방국을 향한 대북관계 개선 촉구는 이들의 국내정치 현실을 무시한 일종의 압박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장 중시돼야 할 북한의 의도 또는 북한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둘러싼 해석이다.

북한이 현 시점에서 원하는 것은 체제 동요를 촉발할 위험성이 있는 조치들은 차단하면서 경화(硬貨) 확보 혹은 경제회생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수사학적으로 큰 대미 및 대일 정치관계 개선을 주장해 왔지만 북한체제 자체가 취약한 상황에서, 또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 가선 수교가 가능해 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북한이 정치적 부담이 따를 국교수교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인지 의문이다.⁴⁾

현재 북한으로선 상징적(象徴的) 의미의 정치관계 정상화보다 경제회생책과 안전보장 방안을 확보하는 데 대남 및 대미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수교에 앞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가 애초에는 북측의 강력한 촉구에 따라 시작됐으나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체제의 취약성이 노정되면서 부터 북한은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이 연락사무소 개설의 의미를 대북정보 확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규정 한 것도 북측을 움츠러들게 한 원인이다.

아울러 북한은 미정부가 연락사무소 개설에 집착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시간은북한측에 있다는 자세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북미수교가 아닌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만약 이 문제에 우리 정부가 동의한다면, 그리고 미국이 현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상쇄하기 위한 극한(極限)조치로서 이를 검토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의 목적은 태반 달성된 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과 관련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단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구상과 중장기적 실천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상징적 의미의 수교 대신 평화협정 체결을 쉽게 지지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하의혹시설과 미사일 위협이란 현안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면 우리 정부가 지지하는 포괄적 협상안과 냉전구조 해체 과정과 병행해 인내력을 갖고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는 접근법이 미국과 일본이 구상하는 현안 처리의 시간적 제약과 충돌할 가능성은 남게 된다. 접근방법상의 동의가 문제라기 보다 합의된 포괄협상안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호응도를 놓고 우리 정부와 미일간의 해석의 차이가 우방국간의 마찰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다. 남북관계의 장래와 국민적 공감대

이와 관련 우리가 상정하는 남북관계의 장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과연 가능한가라는 데 대해 자문해 봐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현안 해법과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도를 둘러싸고 우방국간 견해차가 있을 때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지와 정부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예에 비춰볼 때 북측의 호응 여하에 따라 국민여론이 흔들리고 국내정국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

IMF사태와 관련 국민 대다수가 남북관계 악화로 국내 경제사정이 더욱 나빠질까 우려하는 상황인지라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시비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유연정책(柔軟政策)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주변국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 국내여론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더욱이 보수진영과의 연합에 의해 정국을 운영해 가는 현 정부가 집권당내 견해차와 더불어 여론동향의 변화를 국내정치에 반영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도전받게 될 여지도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조치들을 꾸준히 또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남북관계 개선의 구조적 보장책인 냉전구조 해체 노력을 주도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더욱이 미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와중에 북한에 대한 압박(壓迫)정책이 가미될 경우에 대비해 북측이 대남관계 개선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양상도 냉전구조 해체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닐지라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정부의 입지를 넓혀주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적어도 워싱턴내에선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의 입지를 넓혀주고 미국은 지원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무시못할 현실이다. 이같은 주장은 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의회 및 전문가 집단내) 신뢰감이 저하되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는 데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의 배경에는 논리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한국내 폭넓은 지지라는 요

소가 자리잡고 있다.

라. 주변국의 이해관계 및 주변국간의 관계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우리의 구상 및 의지와 여하히 조화시킬 것인가 또한 고려해야 한다.

냉전구조 해체 과정에서 주변국의 호응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할 때 적어도 주변 4강이 구상하는 한반도의 장래와 중장기 전략에 대한 이해없이 우리 정부 구상의 원만한 추진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가지 긍정적 현상은 주변 4국 모두 현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고 있으며 소위 현상유지(status quo)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북한의 연착륙(軟着陸, soft landing), 상호 非호전적인 안보환경, 지속적인 경제번영, 한반도 비핵화(非核化)와 (다소 견해차는 있을지언정)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자국의 국가이익과 일치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⁵⁾

다만 한국이 냉전구조 해체에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주변 4국 가운데 특정 국가의 전략적 궤도(strategic orbit)에 흡수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기존의 안보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수반할 경우

5) 주변 4국이 가까운 시일내 한반도 통일을 구현시키는 데 진력하는 것이란 말은 물론 아니다. 당사국인 한국조차 조속한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통일과정에서 치를 대가 혹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고려가 작용하고 있으며 주변 4국 또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4국 어느 지도자도 한반도가 통일과정에 진입했다고 판단할 때 이를 억지하거나 방해할 명분이나 역량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결국 남북한이 결정할 문제라는 얘기다.

여타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통일한국이 동북아 안보구도 안에서 차지할 위상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도 강조하고 있듯이) 한미동맹관계의 틀 안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한 만큼 오히려 이 구상이 여타 주변국들(특히 중국)의 반발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⁶⁾

(1) 미국의 입장

미국은 동아시아 정책의 기본 축(軸)으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들고 있으며 10만명에 달하는 미군의 전진배치가 안보동맹의 상징적이며 실질적인 보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소련붕괴이후 중국을 동아시아의 주적(主敵)으로 삼았던 미정부의 정책은 미중 양국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함으로써 전략개념에 수정을 가했지만 이는 중국의 장래와 역량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일 뿐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한반도와 관련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을 상대하면서 중국의 지원과 협조를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은 4자회담은 물론 북미관계에 있어서도 사안에 따라 중국과의 정책조율의 필요성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우리 정부의 냉전구조 해체 구상과 관련 논리적 개념 전개에는 공감하되 실천적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미국의 동북아

6)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탈냉전시대 동북아 안보정세에 관해선 Ralph A. Cossa, *The Major Powers in Northeast Asian Security*,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Washington, D.C., August 1996); William E. Odom, *Trial after Triumph: East Asia after the Cold War* (Indianapolis, Hudson Institute, 1992); Robert Dujarric ed., *Korea: Security Pivot in Northeast Asia* (Indianapolis, Hudson Institute, 1998).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미정부 정책에 간여하는 상당수 인사들은 북한의 당면한 위협 해소에 집착하면서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략적 자원(資源)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안보구도 자체에 변화를 수반할 냉전구조 해체란 구상에 심각한 관심을 기울일 형편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구상이 한미 안보동맹을 근간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될 것이라곤 하지만 구조적으로 동맹관계의 성격변화와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를 불가피하게 수반할 것이라는 데 긴장하고 있다. 사실 현 상황에서 미정부가 재검토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포괄적 대안과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단호한 대응책 가운데 주한미군 혹은 역내 미군의 규모 확대와 군사력 증강 등의 구상이 한국의 냉전구조 해체 방향과 배치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김대통령이 취임전부터 강조한 “통일이후에도 적정 수준의 미군주둔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 정부의 냉전구조 해체 구상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한중관계의 성격변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아울러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해법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지표명이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재설정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2) 일본의 입장

작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은 일본이 자국의 안보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하게되는 시발점이 됐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이전(移轉)에 대해 문제삼고 있지만 자국의 안보를 미일 안보동맹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이 자국의 안보상의 취

약점과 대안을 재고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중장기적 시각에서 볼 때 동북아 안보구도의 변화 가능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안보 취약점 보완을 위해 미일 전역미사일 방어체제(TMD) 개발에 참여의사를 밝혔고 대북 정보수집을 위한 정찰위성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자국의 입김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경수로 지원경비 제공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미일간 신방위지침의 의회통과 여부를 볼모로 삼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촉구하는 북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국민정서를 이유로 유보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미정부의 대북관계 개선의 폭과 속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다. 오히려 현안에 대한 해법 모색 과정에서 미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경우 일본이 북한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검토를 재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일본은 한국정부의 냉전구조 해체 구상이 한미 동맹관계 및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에 변화를 수반할 때 주일미군에 미칠 파장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적어도 일본으로선 주한미군이 행사하는 역할이 단순히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일차적 대응을 넘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경우 (통일)한국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억지와 한중간의 전략적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일간 역사적 감정이 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충격흡수 역할도 주한미군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다른 한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4자회담에서 제외된 일본은 김대중대통령이 언급한 동북아 6개국 협의창구 개설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냉전구조 해체 과정에서 일본의 참여와 적절한 역할이 반영되길 희망하고 있다.

결국 미일 안보동맹을 기본 축(軸)으로 미중 접근이 일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의 냉전구조 해체 노력이 한중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3) 중국의 입장

중국은 한국이 미국 일변도의 대북정책 구도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포용정책 기조에 충실한 대북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데 안도하고 있다.

북한의 붕괴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대량 난민(難民) 유입 등 북한체제의 악화에 우려를 갖고 있는 중국은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희생의 첩경이라 판단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한반도 전체에 미국의 영향력 확대란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균형감을 부여하며 대북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한중관계가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일동맹이 중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중관계가 이에 대한 견제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길 바라고 있다.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은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장래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려 하고 있으나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에 참여를 꺼리며 북한에 대한 독자적 영향력 행사의 창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우리 정부의 냉전구조 해체 구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한국의 구상이 한미 동맹관계 이완(弛緩)과 주한미군의 규모 및 위상 변화를 수반하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한

미 안보동맹의 기본틀 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냉전구조 해체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남북한 간에 한반도의 장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하며 중국의 입지에 부정적 파장이 미치는 상황을 차단하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⁷⁾

(4) 러시아의 입장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 가능성으로 동북아 안보상황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에 한계를 맞고 있는 러시아는 4자회담이 아닌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6개국 안보포럼 및 유엔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의체구상 등을 지지하고 있다.

한반도 양측에 미국의 입김이 확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는 한국의 북방정책 결과 훼손된 대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정립하려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미관계를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조관계에 한계를 확인하고 있는 러시아는 한반도 안보 정착에 긍정적 기여를 하기 보다는 러시아가 배제된 채 진행될 여지가 있는

7) 한반도의 장래 및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있어 중국의 역할과 관련 미국내에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즉 그동안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과대평가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어느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강하며 미국주도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또한 중국이 적절한 역할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나아가 중국과의 정책조율이 결여된 대북정책은 포용책이든 강경책이든 성공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자리잡고 있다. 아놀드 캔터 전국무차관과 제임스 릴리 전주한 및 주중대사는 각각 지난 1월26일과 2월11일 가진 필자와의 대화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리차드 솔로몬 미평화연구소장(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역시 지난 2월10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냉전구조 해체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존재(spoiler)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상에서 언급한 주변 각국의 입장과 더불어 한국의 냉전구조 해체 노력이 특정 국가의 입장과 충돌할 경우 이를 상쇄하거나 무마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외교적, 정치적 혹은 군사적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구도의 장래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주변국의 입장을 한국이 구상하는 한반도의 안보 틀에 접목하기 위해선 모두가 간여하게 될 동북아 안보구도에 대한(잠정적이거나) 그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때 고려할 사항으로 한미 안보동맹관계 및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 가능성, 동북아 다자간 안보구도의 가능성, 관민(民官)이 함께 참여해 동북아 안보를 논의하는 Track Two 창구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마. 남북관계와 기타 양자 및 다자관계 조율

정부의 냉전구조 해체 구상이 직면하게 될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추구하는 북미 및 북일관계 개선과 북한의 경제회생 및 안전보장 지원책이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면서도 남북관계에는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당국이 대미관계에서의 성의 표시와 대남관계 경색을 혼란한 전략을 구사하던 과거와 달리 한국에 대해 다소 협조적인 자세를 보일 조짐이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북측의 행태가 한국으로부터의 경제협력과 식량 및 비료지원 등 실익(實益)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대남관계에서의 긍정적 제스처가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차단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향후 미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포괄적 접근법을 구사하며 실질적 포용책으로 전환될 경우 태도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과 우방국의 대북관계 개선이 조화를 이루며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 하되 현실 세계에선 북한이 인식하는 한국과 우방국들의 역할과 비중에 편차가 있기 마련이다. 즉 안보문제에 있어선 미국과 상대하고 경협 등 실질적 이득은 한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확보하겠다는 북측 계산이 앞서게 될 것이란 말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 정부가 4자회담에 임하는 입장에서 밝혀졌듯이 한반도 평화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남북한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따라서 남북간의 군사적 문제를 주변국의 간여없이 논의하고 해결한다는 입장이 장차 북한의 북미 장성급 접촉,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 등과 이에 대한 미측의 입장 사이에서 설 땅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4자회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억지를 위한 북미협상, 북한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되는 한미일 삼국간 정책협의 등의 창구를 여하히 활용할 것인가도 문제다.

사실 4자회담 뿐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미사일협상과 지하의혹시설 사찰 협상 등이 모두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원론적(原論的)으로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논의돼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는 지하의혹시설과 미사일 위협 문제 등을 한국이 직면한 시급한 위협이라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미,일 양국에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이 사실이라면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이란 원론적 주장을 동시에 개선하는 동시에 북미 기본합의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미,일 양국이 중시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취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이중적 자세가 대북전략상 효과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책조율을 통해 우리 정부의 진의(眞意)에 대한 의구심이 없을 때 비로소 이같은 이중적 자세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남북당국간 접촉이 정례화(定例化)되면서 남북 당사국간 대화창구를 냉전구조 해체 논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해 볼 문제다. 게다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논의에 가지는 의미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와 관련 워싱턴내 논의 가운데 북한 다루기에 있어 한국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주장에 더해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상도 주목할만한 일이다.⁸⁾

한편 한국으로선 북한관련 대부분의 문제들을 기왕에 합의한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란 틀을 통해 풀겠다는 의지와 기본 입장을 쉽게 포기해선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그동안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정부가 주도하는 대북협상이 압도했던 까닭에 한국의 정책입자가 상대적으로 좁아들었던 상황에서 조속히 탈피하는 것

8) 지난 2월10일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에드윈 풀러 해리티지재단 소장은 과거 미정부의 대북정책이 북미 기본합의에 집착하며 남북간 기본합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미정부가 북미 기본합의에 명시된 남북관계 개선에 심각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요즘들어 부각된 것은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해서라기 보다 미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성격이 짙다.

이 현 정부가 구상하는 냉전구조 해체 노력에 있어 한국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양자 및 다자관계와 관련 현재 존속하는 한미, 미일 안보동맹과 북중, 북러 동맹관계에 변화를 야기시킴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는 구상보다 남북한 모두에 대한 안전보장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냉전구조 해체가 한반도내 남북간 평화공존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촉구하는 바와 같이 주변국들의 남북한 교차 승인(交叉承認)이 이뤄질 때 비로소 남북한간의 군축(軍縮)을 포함한 실질적 안보논의와 주변국들이 함께 참여해 한반도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다자간 안보논의가 가능해 진다. 다시말해 동북아 안보논의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상은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직접대화 없이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얘기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보구도는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때 안정을 찾게 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을 상징할 경우에도 미중간의 우호적 관계가 통일한국의 안정된 발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한반도내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면 적어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마찰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도 생각해 볼 점이다.⁹⁾

9) 미정부는 미일 안보동맹을 동아시아 정책의 근간으로 간주하면서 대중관계의 정상화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도모해 왔으며 중국의 인권문제, 대만 관계 및 무역분야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긍정적 기여를 누차 표명해 왔다.

바. 분단비용 절감 차원의 고려

냉전구조 해체 과정은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意志)와 안보환경 전환을 위한 외교적 감각 및 전략적 사고에 기초할 때 순조롭게 진척될 수 있다. 그러나 매 과정마다 치뤄야 할 비용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해소를 위한 포괄적 대안을 촉구하는 우리 정부는 아무리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협상이라 할지라도 이에 따를 경제적 부담 공여에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약속된 경수로 경비에 더해 지하의혹시설 사찰에 대한 대가 지불을 외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북미 기본합의에 따라 미측주도의 중유 제공 경비 제공에 미의회가 난색을 표할 경우 국제사회를 향한 미국의 지원요청을 외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¹⁰⁾ 혹은 우리 정부가 명분상 또는 국민정서상 중유지원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기타 대북(경제)지원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부는 이때 미국주도의 국제적 대북지원에 참여하기 보다 남북 당사국간 지원이란 명분을 앞세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남북관계에서 긴장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우

10) 로버트 매닝 미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대북정책에 대한 미의회의 불만을 해소하고 한국주도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 방편으로 중유제공 경비 마련에 한국이 부분적으로나마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매닝은 작년 6월 CFR의 한반도 정책 보고서 작성에 적극 참여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미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CFR, 미 평화연구소(USIP)의 작업 뿐 아니라 리차드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보가 주도하는 소위 Team-B의 작업에 모두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활동적인 인물이다.

리 정부는 대북 현안 해결과 장기적 차원의 냉전구조 해체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이 초래할 각종 비용과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요될 비용간에 냉철한 비교작업을 통해 정책에 대한 명분과 실리를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독일의 경우를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동서독간의 관계와 현 남북관계의 비교 뿐아니라 독일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변국의 입장과 현 한반도 주변정세를 비교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현실적으로 냉전구조 해체 작업은 현 한반도 안보정세를 지배하는 냉전질서를 ‘차가운 평화(Cold Peace)’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를 설정하고 평화공존 정착을 달성한 후 과거 독일통일의 막바지 상황에서 동원한 ‘2+4 포물라’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남북한 공히 분단비용에 대한 심각한 이해를 공유하지 않는 한 실질적 통일과정에 돌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바 적어도 우리 정부만이라도 분단비용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평화유지 비용을 계산하고 나아가 통일비용 산출이란 일련의 과정을 북한과 주변국들에 앞서 상정해 가면서 대북 및 대주변국정책을 수립해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사. 독일의 사례가 주는 교훈

통일외교 차원에서 독일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과거 서독과 같이 경제적 역량을 갖춰 주변국 외교에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주변국 가운데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통일의 막바지 상황에서 강력한 지지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이다.

아울러 통일한국이 동북아 지역 안보구도 안에서 균형된 역할을 행사함으로써 역내 어떤 국가의 안보에도 위협이나 골칫거리가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누차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냉전구조 해체와 나아가 통일환경 조성 차원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또한 한국의 대북 및 대외정책이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은 바탕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이같은 교훈에 깔린 일관된 논리란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¹¹⁾

3. 정책과제: 논의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제까지 냉전구조 해체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 들을 검토해 보았다.

요약컨대 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란 닥친 위협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란 과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정당성(正當性)이 확인되고 있으며 ②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한 장기적 차원의 냉전구조 해체 구상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기 어렵고 ③ 남북관계 개선과 냉전구조 해체 작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지지와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④ 북한체제와의 평화적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체제의 내구성(耐久性)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11) 독일의 통일이교가 주는 교훈에 관해선 김학성, 「서독의 분단질서 관리 외 교정책 연구: 한국 통일이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과 박영호, 「한국의 대미 통일이교전략」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9)에 잘 정리돼 있다.

예측 못할 상황에 따른 북한내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필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

나아가 ⑤ 미국 일변도의 안보정책이 가져온 한계와 치뤄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지만 주변국이 간여될 수 밖에 없는 냉전구조 해체 과정에 한미 안보동맹이란 안전장치(安全裝置)를 무시한 채 대주변국 균형외교를 추진하는 것은 적어도 현 상황에선 위험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현실도 간과해선 안된다. 다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장치와 북한이 인식하는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감소에 상응하는 대남 군사적 위협 감소가 한미 안보동맹관계의 성격변화를 수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⑥ 현 정부의 적극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 과정 및 정권교체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과 대북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지지기반 확산 노력 또한 필요하다.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국가정책의 신뢰성 확보가 관건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국내지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합리적(sensible) 정책구사, 국제감각있는 외교정책 지도자 등이 겸비될 때 냉전구조 해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말해 국력의 한계를 반영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구사하면서 주변국의 지지여지를 확대하되 적극적인 북한 부양책(浮揚策)에 대한(특히 미국과 일본으로 부터의) 지지 확보의 한계와 북한의 자생력 혹은 자구책 모색 여지가 넓지 않아(또는 개방과 개혁과정에서 직면할 딜레마 때문에) 안정된 변화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급변사태(contingency) 대비책까지를 포함한 냉전구조 해체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상당기간을 두고 우리가 풀어

가야 할 정책과제들을 실천의 앞뒤를 따져 열거하면서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정책적 시안(試案)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안전보장 장치 부여와 북미 기본합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북한내 의혹시설 사찰
 - 미국의 대북 NSA(Negative Security Assurances) 명시적 재확인¹²⁾
 - 한국내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핵관련 의혹시설 사찰 허용¹³⁾
 -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억지를 위한 관련국 및 국제사회의 보상책 마련
- 주변국에 의한 교차승인 완료
 - 미, 일 양국의 북한 승인과 관계정상화
 - 동북아 안보논의를 위한 다자간 안보협의체 가동
 - 주변국 모두가 참여해 한반도를 표적으로 한 군사활동 포기 선언
-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포기 선언과 한국의 대북 정책 3원칙 재천명

12) 93년 6월11일 북미 양국은 북핵문제 협상 과정에서 진행된 제1단계 뉴욕회담 결과 공동발표문에서 상호간에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위협과 무력사용을 억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3) 이 문제에 관해서는 94년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측의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 한미간에 논의한 결과 긍정적 결론을 내린 바 있어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김 기본합의 이행을 위한 미국무부내 팀장을 맡았고 올해초부터 카트먼 한반도 평화논의 전담대사를 보좌하고 있는 조엘 위트 역시 작년 11월17일 기고문에서 같은 내용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Joel Wit, "Dealing wit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NAPSNET Special Report*, November 17, 1998.

- 일방적 혹은 남북한간 및 다자간 창구를 통한 의지 천명
- 남북한의 의지 표명에 대해 다자간 포럼에서 인증

- 남북당사국 대화 재개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 추진
 - 한국의 대북 직접 경제지원책 실천
 - 국제사회(국가 혹은 국제기구)의 대북 경제지원 혹은 대북경제협력 본격화
 -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른 북한의 경제행태 과시
 - 북한의 재래식 무기체계의 평화적 이용 전환을 위해 국제적 지원책(구소련의 핵무기 및 핵물질의 평화적 전환을 위한 미국의 Nunn-Lugar Initiative와 유사한 방안) 모색¹⁴⁾

- 4자회담 혹은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른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책 실천
 -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배치 억지를 위한 남북한의 국제규범(MTCR 및 CWC) 준수 의지 천명
 - DMZ의 평화적 활용 및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억지하기 위한 국제적 보장방안 강구
 - 남북한간 군사력 감축을 위한 논의 시작

- 남북간 교류, 협력을 위한 실질적 방안 확대
 - 관민(民官)합동의 대북 경제회생책 강구

14) "Challenges of Building a Korean Peace Process: Political and Economic Trans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U.S. Institute of Peace, *Special Report*, June 1998.

- 남북 당국간 각종, 각급회담의 정례화(定例化)
- 남북간 인적교류 확대

- 남북회담과 다자간 안보협의체 동시 가동
 - 남북간 합의에 대한 국제적 보장책 모색
 - 실질적 남북공동체 구현
 - 남북 기본합의서의 순조로운 이행에 따라 남북간 보다 포괄적인 합의문 논의, 남북공동체 가동을 위한 구체적 방안 협의

- 한미 안보동맹관계의 성격변화 논의 및 주한미군의 규모 및 위상 재검토
 - 남북한 군사력 감축에 상응하는 주한미군의 규모 및 재배치 논의

이상에서 제시한 시안(試案)들은 과거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이미 논의됐던 것들이며 새로울 바 없다. 또 사태의 진전에 따라 앞뒤를 바꾸거나 혹은 병행해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이에따라 자구책 모색 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피상적(皮相的)으로 논의됐던 구상들을 실천에 옮겨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 졌다는 점이 달라졌을 따름이다.

더욱이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과 수시로 접촉했던 미국이 북한 다루기에 있어 새로운 해법이 가미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냉전구조 해체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구상의 실천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안보구도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주변국 모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이란 목표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 역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긍정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미, 일, 중 삼국과 모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 부상되고 있다는 점도 의미있는 현상이다.

현실적으로 한미 안보동맹에 기초한 군사 억지력 유지를 포기하지 않은 한국이 이상에 언급된 구상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초점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하는데 모아지고 있다면 (애초 의도대로) 북한체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민족 공멸(共滅)의 여지를 줄이고 나아가 한반도 장래에 주변국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는 남북 당사국간 대화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냉전구조 해체 노력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된다.

II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장기·포괄적 접근(시론)

허 문 영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지난 한 해는 문자 그대로 긍정과 부정이 교차된 해였다. 통일소매의 행렬이 유유히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행하였고, 금강산관광 및 개발의 뱃길도 뚫리는가 하면, 북한의 현실적응적 헌법수정(사회주의시장경제 초기단계 도입)과 조건부 「남북고위급 정치회담」의 제의, 4자회담의 진전과 유엔사-북한간 장성급회담의 재개 등 화해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잠수정 침투사건, 금창리 지하핵의혹 시설문제, 탄도로켓 시험발사와 개발문제, 「강성대국론」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위기관리체제의 지속 등으로 긴장요인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 가운데 김대중 정부는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무력도발 불용·흡수통일 배제·화해협력 적극 추진을 3대원칙으로 설정한 「대북정책」을 상황의 동요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전개하였다. 그 결과 남북관계가 대결구도에서 화해·협력구도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이 다음과 같이 조성되었다.

첫째, 남한의 정경분리정책과 북한의 실리추구정책으로 인해 남북

한 협력·의존 구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방북 인원수의 경우, 지난 9년간 2,408명이었던데 반해, 1998년 한 해에만 3,317명이 방북 하였다. 이산가족의 경우, 제3국에서의 108건(전년 대비 1.7배)의 가족상봉이 있었고, 377건(전년 대비 2.3배)의 생사가 확인된 것으로 추계된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그간 2만 7,000여명이 금강산에 다녀올 수 있었다. 남북경협외의 경우, IMF로 인해 반입량이 50% 가량 줄었으나, 대북 임가공 및 투자분야 등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다.

둘째, 각종 남북대화 채널이 복원되거나 진전되었다. 판문점 장성급회담이 성사('98.6.23)됨으로써, 중단 7년만에 정전상태의 관리를 위한 대화가 재개되었다. 또한 제3차 4자회담('98.10.21~24)에서 2개 분과위 구성에 합의, 실질문제 토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제4차 4자회담('99.1.18~22)을 통해 진행하였다. 그리고 비료회담, 적십자회담, 비공개 접촉 등을 통해 남북 대화가 진행된 점과 핵의혹 회담, 미사일 회담, 테러 회담 등을 통해 북·미회담이 계속 유지된 것도 대북정책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남한의 주도적 역할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북 포용정책의 전개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자, 이에 북한이 반응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국내적으로는 「민화협」 결성을 통해 보수·진보를 망라한 성향의 통일논의를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형성하였다. 이같은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또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아직도 냉전구조의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선전공세적 비판 및 무력도발 지속, 국내의 정치적 토양과 얽힌 「햇볕론」에 대한 갈등과 시비, 주변국가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구심과 대북 강경적 분위기 확산 등이 그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할 상황에 들어서고 있다. 즉 남한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21세기 한민족의 평화통일시대를 기약하는 평화정책의 수립을 안·밖으로부터 요청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시론에서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의미와 필요성 및 가능성을 규명해 볼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을 시론적 수준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의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규정하기 위해 구성요소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냉전(Cold War)은 일반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극적으로 체제화된 공산주의진영과 자유민주진영간의 정치·외교·이념적 갈등이나 군사적 위협의 잠재적인 권력투쟁을 뜻한다.¹⁾ 말하자면 냉전은 열전(Hot War)과 대조되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이며 신경전인 것이다. 냉전 용어가 보편화된 것은 미국의 평론가 리프만(W. Lippmann)이 그의 논문 표제(The Cold War, 1947)로서 사용한데서 비롯되었다.

구조(Structure)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닌 사회과학적 개념이다.

① 구조는 사회적 행위(social behavior)중 비교적 영속적(enduring)

1) 「정치학대사전」, (서울: 박영사, 1979), p. 331.

이거나 지속적(persistent)인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²⁾ 교회, 학교와 같은 형식적 조직과 결혼 등과 같은 제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② 구조는 ‘부분들의 배열’(arrangement of parts)이라는 의미도 있다. 사회의 여러 구성요소들이나 부분들의 배열이 현상의 변화를 통제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³⁾ ③ 구조는 체제(system)와 동일한 의미로 쓰일 경우도 많다. 체제란 부분들(parts)과 그들 사이의 관계(relationships)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⁴⁾, 부분들의 배열로서의 구조의 개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보면 냉전구조는 냉전 체제와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다. ④ 마지막으로 구조는 사회생활과 역사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하위층(substratum) 또는 심층구조(deep structure)로 파악되기도 한다. 구조-기능주의의 경우 구조의 결과로서 체제의 어떤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방법론적 현실주의의 경우 현상으로 나타나는 외양(appearances)은 ‘관찰할 수 없는(unobservable) 실체들과 그 상호간의 관계인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강조한다.⁵⁾ 이와 같은 구조에 대한 분석은 적대적 갈등상황에 있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George C. Homans, "What Do We Mean by Social Structure?" in Peter M. Blau(ed.), *Approaches to the study of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pp. 53~54.

3) William J. Goode, "Homan's and Merton's Structural Approach," in *ibid.*, p. 74.

4) A. D. Hall & R. E. Fagen, "Definition of System," in Walter Bulkeley(ed.), *Modern System Research for the Behavioral Scientist: A Sourcebook*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68), p. 83.

5) 부부간에 나타나는 불만감, 잔소리, 말싸움, 몸싸움, 절망감 등이 왜 생기는가 하는 원인을 놓고 이러한 외양의 심층분석을 통해 어느 일방의 책임이 아닌 부부의 관계 즉 남편의 남성구실을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아내의 억눌린 분노가 하나의 인과메커니즘(causal mechanism)으로 작용하여 그러한 갈등을 만들어 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Ian Craib, *Modern Social Theory: From Parsons to Habermas* (Brighton, Sussex: Wheatsheaf Book, ltd., 1984), p. 25, 오명호, 「현대정치학방법론」 (서울: 박영사, 1995), p. 138. 재인용.

한편 국제문제를 분석하는 경우 분석 수준(Level of Analysis)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국제체제, 지역체제, 국가, 제도, 조직, 집단, 개인 등이 분석 수준으로 고려된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 수준을 국제(global)수준·남북한 상호관계(inter state)수준·남북한 각각의 국내(domestic)수준·남북한주민 개인(individual)수준으로 구분하여 모두 다루고자 한다.

한반도 냉전구조는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한반도 냉전구조는 3단계를 거쳐 중첩적으로 형성되었다. 1945년 8월 15일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점령함으로써 제1단계인 ‘국토분단’이 진행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으로 제 2단계인 ‘주권(정부)분단’ 진행되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따른 3년여의 한국전쟁으로 동족상잔을 경험함으로써 제 3단계인 ‘민족 분단’이 최종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남한과 북한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적’과 ‘원썩’이 되어 갈등과 자해를 반복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 냉전구조는 국제정치적 권력관계가 주도하고, 민족적 권력투쟁과 동족상잔으로 심리적 적대감이 축적된 복합형으로 성격이 규정된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는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는 ‘대결’(confrontation)적 체제·관계·제도·의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⁶⁾ 이에 대답하

6) 임동원 외교안보수석은 냉전구조 해체의미를 5대과업으로 제시한다. ① 남북 불신대결을 화해·협력구조로 전환 ② 미국·일본의 대북관계 개선 및 정상화 ③ 북한의 개방경제 선택과 국제사회 참여 ④ 한반도 군비통제 및 대량살상무기 제거 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사실상의 통일 달성, 임동원, “1999년도 통일·외교·안보정책 기본방향,” (통일부 및 통일연구원

기 위해 한반도 냉전구조의 특징과 해체 의미를 분석 수준에 따라 규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 수준에서 볼 때, 미·소의 이데올로기적·군사적 대결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자유진영의 미국·일본·한국으로 구성되는 남방삼각관계와 공산진영의 소련·중국·북한으로 구성되는 북방삼각관계가 구성됨에 따라 한반도에는 진영적 대결의 이중삼각관계의 냉전체제가 형성된 것으로 특징화된다. 따라서 이 수준에서의 해체는 양자 동맹관계의 진영적 대결로부터 양자 정상관계 및 다자간 지역안보 협력체제에 의한 상호의존 및 협력관계로의 변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의 대미·일 관계정상화 및 국제사회 참여 지원이 그 핵심적 의미가 된다.

둘째, 남북한관계 수준에서 볼 때, 적대적 정부의 수립과 한국전쟁 그리고 수많은 도발과 응징으로 인해 휴전상태 또는 정전체제와 군비경쟁으로 규정되는 군사적 대결의 냉전관계가 구축된 것으로 특징화된다. 따라서 이 수준에서의 해체는 정치·군사적 화해·협력을 통해 흡수통일 또는 무력·적화통일 추구적 관계를 평화공존 추구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및 한반도 군비통제와 대량살상무기 제거 그리고 북한의 현대화 협력을 의미한다.

셋째, 국내적 수준에서 볼 때,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반공교육 그리고 북한의 형법과 사상교양으로 상징되는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냉전체도가 강화된 것으로 특징화된다. 따라서 이 수준에서의 해체는 남북한 각각 상호 수용적 제도 개발과 평화교육을 통해 동질성 회복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남북한 내부에서 냉전적 법·제도의 개폐 추진과 평화교육 실시, 남북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등을 의미한다.

특강, 1999.2.9.); 「중앙일보」 1999.2.10.

마지막으로 개인적 수준에서 볼 때, 상대방을 ‘적’과 ‘원수’로 증오하는 심정적 대결의 냉전의식이 만연케 되었다. 따라서 이 수준에서의 해체는 상호신뢰성 회복을 통해 통일한국 건설의 ‘동반자’의식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결국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란 국제·남북·국내·개인적 수준에서 ‘대결’(confrontation)과 적대적 공존을 ‘협력’(cooperation)과 평화적 공존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체제·관계·제도·의식을 세계사적 탈냉전 조류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다. 요컨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북한의 체제생존을 보장하는 한편,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구조를 평화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한반도 전쟁 재발 위협을 근본적으로 막고 남북한 공존과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필요성

이와 같은 한반도 냉전구조하에서 남·북한이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단지 현안문제의 미봉 내지 봉합으로 한반도 위기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북한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지 않고서,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와 평화통일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필요성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첫째, 남북한 평화공존과 사실상의 통일을 위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필요하다. 냉전구조로 인해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상존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는 언제든지 무산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평화가 정

착되지 않는 한, 교류·협력은 제한적이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 정부가 냉전구조 해체 없이 교류·협력 우선 시의 대북정책을 추진할 경우, 북한은 이를 평화적 이행전략 즉 체제붕괴를 위한 변화유도 정책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결과 대북정책의 유효성은 약화될 것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험의 과실만을 향유하고, 관계 정상화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남북 교류·협력 및 관계개선의 속도와 강도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체제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외개방과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필요하다. 북한은 제한적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체제유지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재래식 군비 및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만성화된 통치명분으로서 대남혁명노선 견지로 인해 대남 공작·침투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 냉전구조의 근본적 해체 없이는 제2, 제3의 금창리 의혹문제와 잠수정 침투가 계속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평화·안정 증진정책과 교류·협력 정책을 병행할 경우,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을 '유화정책'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를 완화시켜 국민적 통합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쟁억제력 강화, 주한미군 및 한·미 동맹관계 유지 등의 안보태세 견지를 통해 「소극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군사적 신뢰조치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여 「적극적 평화」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첫째 과도한 남북경쟁에서 생기

는 불필요한 민족역량의 소모를 경제발전과 민족번영의 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하다. 남북한 모두 서로 상대방을 제1의 적으로 삼고 지출하는 막대한 군사비(북한 GNP의 30%, 남한 6% 사용)와 국제사회에서의 치열한 외교경쟁에 낭비하는 자원과 역량을 민족번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 각각의 민주화와 현대화가 보다 진전되고, 동북아의 평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하다. 한반도 냉전구조가 지속되는 한 남한사회의 완전한 민주화와 북한사회의 현대화 또는 '북한 스스로의 체제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한반도는 미·일·중·러 4국의 이해가 엇갈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쟁요인을 줄이고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한반도 냉전구조는 해체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소련 '까레스키' 동포와 중국의 '조선족' 동포 그리고 일본의 조총련계 동포들까지 고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지척에 고향을 두고도 가지 못하는 이산가족의 한은 분명 이 시대 이 민족의 최대 비극이다. 이 부자연스런 타율적 이산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 냉전구조는 해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첫째 주변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고 한반도 문제를 민족주체적으로 풀기 위해 필요하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이후 체제생존전략 차원에서 대4국 '유인외교'와 '도입정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 결과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경쟁이 촉발되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미협상을 통해 모든 문제를 풀려는 북한에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카드를 정교하게 제시하여, 북한을 남북 대화석상으로 인도하여 한반도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둘째, 21세기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 유럽의 냉전구

조 해체로 형성되고 있는 탈냉전의 21세기 국제질서는 「열린 세계화」, 무한경쟁·국가실리의 추구 속에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와 역행하고 있는 한반도의 냉전구조가 지속되는 한, 한민족의 통일을 향한 발걸음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을 수밖에 없다. 대결과 단절의 냉전구조는 군비경쟁과 불신·불안의 증폭과 민족역량의 소모를 가져올 뿐이며, 이의 해소 없이 IMF(南)와 모라토리움 체제(北)의 조기 극복과 경제강국에로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따라서 민족자해적 냉전대결구조를 민족자애적 평화협력구조로 전환하는 일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민족사가 요청하고 있는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가능성

가. 긍정적 요인

첫째, 김대중 정부의 사려 깊고도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자세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이룩하는데 있어 기여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특정의 통일방안이나 「통일정책」을 천명하는 대신 「대북정책」이라는 제한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통일헌법」이나 또는 민주선거에 의한 궁극적 체제통일방안을 일단 장기 과제로 넘기고 「평화공존」, 「평화교류」의 실현을 당면목표로 설정,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기반 조성에 주력할 것을 뜻하였다. 「대북정책」은 「포용정책」(대표적 공식명칭)·「화해협력정책」·「평화공존정책」(내용면)·「햇볕정책」(구호적 별칭)으로도 지칭되고 있다. 과거 정부가 화해협력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은밀히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사실이 유포됨으로써 마치 표리부동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판받은 점을 감안, 김대중 정부는 출범 후 흡수통일배제를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천명, 언행일치의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전개해 왔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동요됨이 없이 「안보와 화해협력 병행 추진」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잠수정 침투 및 로켓 발사 등 각종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의 확대재생산을 방지하면서, 남북간 협력의 틀을 정착시킬 수 있었다.

둘째, 주변 4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들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미 양국 정상은 2차례의 정상회담('98.6, 98.11)에서 제네바합의 준수 및 4자회담과 남북대화의 상호보완적 병행추진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중국 또한 한·중 정상회담('98.11)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건설적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하고, 햇볕정책(「陽光政策」)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였다. 일본 또한 한·일 정상회담('98.10)에서 햇볕정책(「太陽政策」)이 일본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긍정적 평가와 지지를 천명하였다. 다만 러시아가 아직 햇볕정책에 대해 공식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남북한 등거리외교 기조하에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 및 평화적 통일 등의 한반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공존정책과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언명 그리고 햇볕정책에 대한 대응의 변화이다. 북한은 이미 1988년 9월 8일 김일성 주석의 공화국 창건 40돌 기념사를 통해 '먹거나 먹히우지 않는 통일' 즉 공존적 통일을 천명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남북 기본합의서」(‘92.2)와 「북·미 기본합의문」(‘94.10) 체결을 통해 체제유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김일성 사망 이후 내부 조정·정비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대화와 관련하여 김정일 문건⁷⁾을 통해 이론적 준비와 북한주민 설득논리를 다져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에는 「2·3 대남 편지」 제의를 통해 다소 완화된 전제조건과 더불어 우리측이 그 동안 제시하던 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정치회담을 제의하였다. 또한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공식적으로 비난을 지속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크게 기대-비난-제한적 수용의 3단계 변화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1998년 9월 이후부터는 햇볕정책을 전면 부인하는 대신, 「북한식 정경분리 정책」을 추진하여 체제유지에 필요한 부분은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 부정적 요인

첫째, 북한의 체제 경직성과 이에 따른 군사주의적 성향이다.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구호가 시사하듯이 「유교 사회주의적 병영국가」 특성을 지니고 있다.⁸⁾ 즉 북한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스탈린주의와 한반도 냉전구조에 체제기반을 두고 있으며, 90년대 들어와 경제시스템의 붕괴에 따른 유효성 약화와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 따른 정당성 위기에 직면하여 군부의 역할 증대로 이에

7)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1997.6.19,” 「로동신문」, 1997.6.2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8.4,” 「로동신문」, 1997.8.20.; “온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1998.4.13,” 「로동신문」, 1998.4.29.

8) 황병덕, “99년도 대북정책 현안과제 및 대응전략,”(민주평통 발표문, 1999.1) pp. 1~3.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평화의 파괴자로서의 남한 및 미국, 평화의 수호자로서의 북한과 김일성 부자의 이미지와 담론체계는 북한체제를 근본적 차원에서 결집시켜 주는 역할을 감당한다. 따라서 급진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의 민주화 수준 및 경제발전상을 목격케 할 것이며, 그 결과 대남 적대 및 우월의식의 허상을 깨뜨리면서 북한체제의 급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남 적대적 관계를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둘째, 남한의 정세불안정 및 국론분열 가능성이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 확대에 따른 경제적 혼란, 정계개편과 내각제 개헌 논의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의 만연과 지역갈등구조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이 확대될 경우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잠재적 비판이 다시 전면으로 부각되어 남북관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대북 지원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보수적 여론, 조건부 지원을 표명하는 중도적 여론, 전면 지원을 강조하는 급진적 여론의 상호 경쟁에 따른 국론분열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주동적 역할을 억제하기 쉽다.

셋째,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다. 동북아 지역은 탈냉전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냉전의 유산이 잔존하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유동적이던 동북아 정세는 1990년대 중반에 들어 미·일 대 중·러를 축으로 하는 느슨한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미·일은 동북아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방위협력과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 도모를 주내용으로 하는 「신안보공동선언」을 채택('96.4.17)하고, 방위협력지침을 개정('97.4)하여 안보동맹관계를 강화하였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개최('96.4.25)하고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협력동반

자'관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물론 한반도 주변4국은 모두 국제환경이 적대적 관계로 악화되기보다는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는 냉전의 유산인 남북한 및 중·대만의 분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각국간 영토문제와 군비경쟁이 여전히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결과 남·북한 및 중국·대만·일본은 동북아질서의 변화가 자국 안보이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해 국방현대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수립시 고려사항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7가지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⁹⁾

첫째,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튼튼한 안보태세의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북원칙의 제1원칙(무력도발 불용납)은 결코 상징적 강조어가 아님을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는 필경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태세에 대한 일말의 국민적 불안감과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는 처방책이 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올 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1999.1.4)에서 안보 3원칙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증진, 남북간 화해협력의 지속적 추구, 안보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관계의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안보 3원칙은 안전보장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병행·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둘째, 정부는 한반도문제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의 이중성을 지

9) 양영식,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의미와 과제,” (KNCC 주최 금강산관광선상특별강연, 1999.2)

니고 있음을 감안, 우리 주도하에 냉전구조 해체 추진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 안보동맹과 한·미·일 안보 억제전략에 기초한 한·미·일 3국의 협력과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 추진과 함께 단계적으로는 주변4국의 정상외교 본격가동, 한·중 불가침협정과 북·미, 북·일수교,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정경분리 및 신축적 상호주의 원칙과 남북한 평화공존 및 화해협력 지향이라는 장기적 전략구도에 따라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선 민간·후 당국, 반관·반민, 당국간 협력 방식 등 가용한 다변적 방법(단계적·병행적 또는 선민간 후당국 등)을 유효 적절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소매의 북행길, 금강산 뱃길의 물꼬를 튼 것을 계기로 1985년 경제회담에서 사실상 원칙적 의견접근을 본 경의선 철도길(1984년 수재물자 인도인수시에는 북평양, 인천항과 북한항구의 항로연결이 있었음)도 연결해 나가도록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국제항공기구들과 연계 하에 남북영공의 하늘 길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며, 남북공동어로분야를 비롯, 관광분야, 농협분야, 경협분야 공동협력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되 문화체육분야, 정치인 접촉에 이르기까지 다각적 접촉·교류의 촉진을 위한 대북 협상을 적극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질적 이행과 직결되는 과제이다. 북으로 향한 잦은 발걸음은 필경 21세기 초 사실상의 통일의 첩경으로 들어서는 역사적 행보가 될 것이다.

넷째, 정부는 남북대화는 물론 남남대화의 광장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는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논의이어야 함을 뜻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민주평통을 비

롯, 민화협과 민간 「통일문제연구협의회」 및 대학통일문제연구소 등이 주도하는 「통일대화의 광장」(세미나, 통일공청회와 청문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분단 이후 출생자가 남과 북의 전체 인구 중 각각 83%와 87%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컴퓨터 세대·사이버 세대인 신세대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의 통일 논의(예: 통일문제 전자공청회, 인터넷 홈페이지 통일장 설치 등)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화의 장(場)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대한민국을 더욱 매력 있는 자유민주체제로 다져 나가는 일에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진력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평화공존과 다각적 교류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한 민주서독의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¹⁰⁾ 통일방안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민족구성원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자유민주체제의 자력(磁力)이다. 남과 북 어느 쪽이 보다 더 민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통일의 주도권을 부여받느냐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남과 북의 민족구성원이 내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실현은 필경 민족자애와 민족친화력을 소생시켜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남북한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샘솟게 하는 통일동력을 우리 민족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근본적 해체야말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짊어져야 할 명예로운 짐이요, 동시에 확실한 통일준비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정부는 북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북한의 입장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단계별로 준비해야 한다.¹¹⁾ 북한

10) 박영호,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 34.

11) 박종철,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53~58.

이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요구사항은 약 20가지가 넘으며,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남·북·미 3자 군사공동기구 설치, 첨단군사장비 반입 중지, 국제공조 및 세계화 책동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및 통일부 해체, 반북대결 책동 중지, 연공·연북정책으로의 전환, '통일애국'인사·양심수 석방, 출소공산주의자 송환, 콘크리트장벽 해체, 조국통일3원칙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실현, 한총련·범민련 활동 보장 및 통일운동 탄압중지, 반통일적 법률·제도·기구 철폐, 대화창구 다원화 허용,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상호주의 및 햇볕정책 철폐, 「민화협」 폐지, 민족 자주성 회복, 민간 교류협력 방해 중지, 김정일에 대한 비방 중지 등이 그것이다. 또한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요구사항은 10가지가 넘는다. 이산가족 상봉 주선료(건당 1만불에서 10만불), 방북대가로 현금 및 식량 등 제공, 방북인사의 김일성 우상물 참배, 비료·농약·비닐방막 등 영농자재 지원, 선박 냉동설비 및 어구자재 지원, 농수산물(참깨, 콩 등) 계약재배, 옥수수·감자 등 종자개량 지원, 의약품과 의료 기자재 지원, 수재 복구용 건설자재 및 장비 지원, 발전설비 지원, 미국 측에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 등이 그것이다. 또한 남북경협규모의 확대와 대북 차관제공, 국제금융시장에서 북한 채권의 인수, 북한군수산업의 민수화전환 지원 등과 같은 대북 유인정책이 북한의 상응하는 정책변화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일곱째, 정부는 미국 및 일본과 우리가 북한에게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핵활동 중지, 북한의 핵무기 완전포기, 금창리 등 지하의혹시설 사찰,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중지와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가입, 테러방지 국제협정 가입 및 테러방지 노력 가시화 등 10여가지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또한 일본인 납치진상 규명 및 송환, 북송 일본

인척 일본방문 및 자유왕래 보장, 미사일 개발 중지 및 핵의혹 규명,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마약·위조지폐 등 국제적 범죄행위 중단, 대남 도발 중지 등 정전협정 체제 준수,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으로의 전환 등 10여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지하의혹시설 성격 규명, 잠수정 등 대남 침투활동 중지, 대남 비방·중상 중지, 정상회담, 특사교환 등 당국간 대화 재개, 남북 적십자회담 재개 및 이산가족문제 해결,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남북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KOTRA 무역관 개설, 대북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보장,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미송환 국군포로 및 납북인사 송환, 관문점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추진, 주민탄압중지 및 북한 인권문제 개선 등 15가지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5.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방안: 장기·포괄적 3단계 추진방안

가. 기본방향과 추진원칙

(1) 기본방향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방안의 정책적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의 공격적 무장력을 완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남북한 평화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흡수통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북한과 주변국가에게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한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북 인식과 자세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반도 문제의 이중 구조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풀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현상유지와 현상타파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민족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문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권 재창출의 문제일 뿐 아니라 21세기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번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새로운 발상을 적극 수용한다. 북한을 더 이상 흡수통일의 대상(object)로서 볼 것이 아니라, 합의통일의 주체(subject)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내적 합의과정을 거쳐 우리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대신 북한과는 모든 의제를 협의할 수 있음을 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안정성과 관련하여서도 '고장난 비행기'에 기초한 조기 붕괴설을 더 이상 운운하지 말고, '무장한 형제'에 기초한 장기 유지설 또는 중기 위기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관도 조기 체제 통일에서 중·장기적 사실상의 통일과 총체적 통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전환기적 인식과 전략적 사고 및 자세를 정립한다. 북한의 정세와 대남전략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는 상황의존적 접근에서 벗어나 목표지향적 접근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북 안보정책도 상대측의 영토에서 승리를 목표로 하는 냉전시대의 '절대적 안보관'에 기초하기보다는, 냉전체제의 해체 흐름에 부응하여 '방어적 충분성'¹²⁾ 즉 자위를 위한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며 상대방에 대한 안보위협감을 최소화하는 '상대적 공동 안보관'에 근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리고 접근자세에 있어

12) 전성훈,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28~40.

서는 북한의 유인외교 및 도입정책에 따른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원칙(‘평화’)중시적 태도를 천명하는 동시에 북한을 우리의 의도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공작적(operational) 태도를 벗어나 민족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적(cooperational)태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각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전환도 적극 수용한다. 정치부문에서는 정치협상에서 평화협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부문에서는 북한 경제붕괴 및 조기 통일비용 논의에서 북한 경제복구 잠재력 평가 및 대북협력 방향 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부문에서는 대북 식량·비료 및 의료 중심의 인도적 지원에서 북한의 농업구조 및 의료체계 개선의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대외부문에 있어서는 국제공조를 모든 사안에 대한 입장 통일이 아니라 북한의 전쟁도발 억제와 한반도 평화구조의 제도화라는 기본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큰 틀을 유지하는 의미로 사용한다.¹³⁾

(2) 추진원칙

첫째, 장기적(long-term) 추진원칙이다. 물론 당면 현안인 금창리 지하핵의혹 시설 규명문제와 미사일발사 및 개발 억제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문제는 단순히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요인을 단기적·미시적·전술적 차원에서 제거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21세기 민족의 생존과 주변국과의 공동번영을 위해 이제는 북한이 느끼는 안보위협을 포함하여 한반도 불안정

13) 이교덕,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 76.

의 근본적 요인들을 보다 장기적·거시적·전략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냉전구조 해체 방안의 조기실현에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의 자세를 천명한 후 북한과 주변국가가 수용할 때까지 기다리며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한다.

둘째, 포괄적(comprehensive) 추진원칙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단순히 안보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치·외교·경제·통상·사회·문화적 차원을 포괄하여 접근하도록 한다.¹⁴⁾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한반도 냉전구조가 단순히 안보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문제, 북·미 관계개선 및 교차승인 문제, 대북 경제제재 해제문제, 남북대화 재개 문제, 한반도 군축 및 비핵화 문제, 남북 이산가족문제, 적대적 갈등구조의 강화문제 등이 독립된 별개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변화와 대외관계 정상화, 남북 화해협력과 군비통제¹⁵⁾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등 제반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도록 한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유인수단으로서 북한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이익의 규모나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해야 하며, 다른 한편 북한이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한다.¹⁶⁾

셋째, 단계적(stage by stage) 추진원칙이다. 남북한간의 불신의 정도가 매우 높고 군사협력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점진·단계적으

14)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문제점,”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문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117.

15)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북한의 우월한 재래식 군사력과 북한의 전진배치, 북한의 기습공격능력 등과 같은 요인들이 포괄적으로 협의되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 동맹관계, 주한미군, 한·미합동군사훈련, 평화체제전환등 한반도 안보환경 전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다.

16) 김도태, 「4자회담 체의 배경과 문제점」(극동문제연구소 제5차 통일전략포럼 '96.6.14), p. 8.

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¹⁷⁾ 그리고 대북 포용정책의 일관성을 목표로 전략차원에서 유지하면서도, 세부과제를 단기적 선결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한 후 상황변수를 고려, 신축적·단계적 해결방안을 수립한다. 따라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제1단계에서 곧바로 3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신축성을 부여하며, 각 단계별 정책도 반드시 해당단계가 아니더라도 융통성 있게 다른 단계에서도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구사한다.¹⁸⁾ 동시에 협상의 가시적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보다 인내를 갖고 단계적 협상의 틀과 추진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한다.

넷째, 일괄타결(package deal) 추진원칙이다. 현 단계 북한의 대외 정책은 체제보장과 경제난 타개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에, 미국 및 일본의 대북 불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를 대북 불신에 대한 안보용, 대미협상카드용, 외화획득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북한의 WMD 확산을 방지하고 대남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나아가 북한의 WMD 개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대신,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원하는 것을 동시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 현안별 대응에 머무르고 말 경우 한반도 냉전구조의 지속에 따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해지며, 안보불안과 적화통일 망상에 사로잡힌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경우 대미 협상카드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반면, 미국은 대북 협상카드와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북한으로서

17) 전성훈,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연구: 포괄적·단계적 구상」(서울: 통일연구원, 1999) 발간예정.

18) 제성호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108~112.

는 대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버랑끝전술을 반복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 긴장 또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괄타결을 적극 검토한다.

다섯째, 국제협력 지향적(international cooperation) 추진원칙이다. 북한이 대미·일 관계개선 및 경제지원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하여,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와 국제화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예컨대 북한이 대미·일관계 개선으로 흡수통일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고,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4자회담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남한과의 군사대화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남북문제와 관련된 사안¹⁹⁾들은 한국의 주도하에 해결하도록 하고,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된 사안²⁰⁾들은 미국·일본과의 긴밀한 정책적 공조 및 중국·러시아와의 협의 하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한국과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역할분담과 공조체제를 통해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입체적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아가 다자간 협력의 틀인 KEDO를 통한 대북 경수로사업이 북한의 경제지원 욕구와 체제혼란 우려간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적극 확대 적용하도록 한다.²¹⁾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국제사회(IMF, IBRD, ADB 등)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북한주민들의 대결적 세계관을 순화시킬 수 있도록 협력하며, 국제기구(WFO, WFP, UNDP, UNIDO, UNICEF 등)를 활용하여 북한의 현대화와 합

19) ① 남북기본합의서 체제 복원 ② 남북 평화협정 체결 ③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대북 경협 및 민간교류 활성화 ④ 한국 중심의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추진

20) ① 대북 경제제재 완화 ② 연락 및 무역사무소 개설과 관계정상화 ③ 핵비확산조약(NPT),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화학무기협정(CWC), 생물무기조약(BWT) 등 국제규범 준수 ④ 군비통제

21) 홍관희,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 49~51.

의사항 실천을 지원토록 한다.

나. 세부 실천 방안

1단계: 현안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평화공존 기반 구축

(1) 목 표

이 시기 안보 분야의 목표는 현안 해결 즉 금창리 지하의혹시설 성격 규명과 미사일(광명성 2호) 추가시험발사 중지이다. 미 의회의 대북중유비용 제공의 1차기간(1999. 3~5, 1,500만불 제공)동안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과 미사일추가발사 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하도록 한다.

비안보 분야의 목표는 남북관계 개선 즉 남북 당국대화 복원과 이산가족 문제 초보적 해결 그리고 4자 본회담 2개 분과위 정례화로 설정할 수 있다.

(2) 포괄적 해결방안

수 준	포괄적 조치
국 제	대북경제제재 부분 해제, 추가식량지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제외, 중유제공,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경수로 본공사 착공, 북한 경제관료 및 군사전문가에 대한 교육·훈련,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IMF, IBRD, ADB등)허용

수 준	포괄적 조치
남북한 관계	고위급특사 파견, 4대난 해소를 위한 당국 및 반관반민 회담추진, 북한관광사업 확대, 대북비방·중상 중지, 시범적 신뢰구축 시행, 이산가족 생사확인, 기본합의서 부분 이행
국내 (남한)	통일교육체계 정비, 국가보안법 개정, 미전향 장기수 송환
국내 (북한)	대북지원 물자 투명성 보장, 현대화 정책 확대(나선지대 KOTRA사무소 허용), 형법 개정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해야 할 조치들을 국제적 수준, 남북한관계 수준, 국내 수준, 개인 수준별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적 수준>

첫째, 북·미 협상을 통해 지하시설 의혹 및 미사일 발사 중지 문제를 일괄타결토록 한다. 이를 위해 ①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 가운데 우선적으로 행정부의 명령으로 가능한 사안들을 해제하도록 한다. 예컨대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해제, 미국기업 해외법인의 대북 투자 및 생산품의 미국반입 허용, 북한인의 미국 유학 허용, 농업생산 증대와 관련한 기초 기술 이전 허용 등이 그것이다. ② 미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추가로 시행하고, 대북 중유 제공도 예정대로 진행시키도록 한다. ③ 미국은 또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토록 한다.

둘째, 북한의 대일·미관계 개선을 지원하여 북한이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고 개방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의 미국내 유학허용과 더불어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일본 또한 일본인 처 고향방문사업과 북·일 수교협상 재개에 적극적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셋째, 경수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적어도 '99년 6월로 세 번째 연기된 본공사 착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 경수로 본공사 착공을 위해 KEDO분담금 협정의 후속조치로서 각국의 대내적 승인절차를 적극 이행하도록 한다.

넷째, 북한이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과 이들 기구의 대북차관 제공, 북한 경제관료 및 전문가들이 국제기구 및 서방세계에서 시장경제에 관한 전문교육·훈련받는 것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군비통제의 개념 및 절차에 대한 인식론적 공감대형성을 위해 북한 군사전문가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예컨대 제3국에서 남북한 군사전문가들이 군비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군비통제의 개념, 추진원칙, 방법 등에 대해 공동훈련을 받는다.

다섯째, 대북농업개발 및 경험을 위한 국제적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북한농업개발을 위해 서는 KEDO 방식의 KADO(Korean Agricultural Development Organization)를 구성하고, UNDP 등 국제기구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국제기구의 대북 개발차관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의 경제자료 공개, 국제기구의 북한경제현황 조사, 북한의 경제개발전략 및 정책추진 우선 순위에 대한 협의 등을 강구한다.

<남북한관계 수준>

첫째,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 해소를 위한 여건조성 차원에서 고위

급 특사를 북한과 주변국에 파견한다. 이는 북·미 일괄타결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위급 특사는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흡수통일 배제, 평화공존 및 남북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의지 등)과 최고당국자의 의사를 「친서」로 전달하도록 한다.

둘째, 판문점 장성급회담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남북 정상 및 군사당국간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등 시범적 신뢰구축 조치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에 노력한다. 또한 남북한간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및 구조적 군비통제에 대한 이행계획표를 마련하여 일괄타결토록 하며, 이를 위한 북한의 입장전환을 위해 구체적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한다. 남북경협규모의 확대, 차관도입의 국제적 보증, 국제사회의 채무불이행(default) 채권 매입, 상업차관 도입 보증, 북한군수산업의 민수화 전환 지원, 기초과학연구소 플랜트 제공(정보화 산업기반 육성), Y2K 지원방안 논의 등이 그것이다.

셋째, 대북 농업지원과 경협 활성화 등 북한의 4대난(식량난·에너지난·외화난·생필품난)해소를 위한 남북 당국 또는 반관반민 회담을 재의한다. 북한의 식량난 및 경제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농업개발 및 경협을 위한 개발원조 제공을 의제로 한다. 개발원조 방식은 비대칭적·비등가적·비동시적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제공한다. 북한이 당국 회담에 부담을 느낄 경우 가칭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등 반관반민 기구에 의한 진행도 적극 고려해 본다. 또한 북한의 관광사업을 금강산 지역에서 백두산·칠보산·나진선봉지대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이산가족문제는 농업지원 및 경협과 직접 연계시키지 않고, 적십자회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진하도록 한다.

<국내적 수준>

남한의 경우 첫째, 사회 각계에 만연되어 있는 냉전 문화, 냉전 의식·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종교계·언론계·문화계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방 방송도 일방적으로 중지한다.

둘째, 국회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미전향 장기수를 사면하고, 출소공산주의자의 북한송환을 허용한다. 또한 남북대화 창구의 다원화를 적극 허용한다.

셋째, 「통일교육 지원법」 세부시행 방안의 구체화 등 통일교육체계 정비를 통해 냉전적 의식·제도·관행의 타파를 위한 통일교육을 강화한다.

북한의 경우, 첫째, 대북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현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KOTRA 무역관을 나진선봉 등 경제무역지대에 개설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넷째, 형법을 개정한다.

2단계: 한반도 교차불가침협정 체결 및 남북평화선언을 통한 남북화해·협력 확대

(1) 목표

이 시기 안보 분야의 목표는 「소극적 평화」를 이룩하는 데 있다. 그것은 군비통제를 실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이 국

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이뤄진다.

비안보 분야의 목표는 「적극적 평화」를 이룩하는 데 있다. 북한체제 보장과 평화체제 전환 차원에서 「북·미불가침협정」과 「한·중불가침협정」을 교차 추진하는 동시에 「남북평화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적극적 평화를 구축한다.

(2) 포괄적 해결방안

수 준	포 괄 적 조 치
국 제	북·미불가침협정, 대4강 정상외교 본격가동, 대북농업개발 및 경험을 위한 국제적 컨소시엄 구성, 한·중불가침협정, 남북한 중국간 군사협력, 주한미군의 후방배치 및 단계적 감축계획 검토,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축소·조정, 북·미간 영사관설치, 북·미무역대표부 설치
남북한 관계	남북정상회담, 남북평화선언, 군비통제, 군비통제 소요비용 부담, 대규모 경험차관 제공, 당국간 경험관련 협정 체결, 북한의 사회간접자본투자, 남·북 무역대표부/연락대표부 설치
국내 (남한)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 한국군 작전통제권 환수, 한총련·범민련 활동 보장
국내 (북한)	대남침투 활동중지, 미송환 국군포로 및 남북인사 송환, 주민탄압 중지

<국제적 수준>

첫째, 북·미간에 있어 「불가침협정」 체결과 신뢰구축 조치들을 적극 추진한다. 「북·미 불가침협정」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여건 조성 및 북한체제의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위해 대북 선제공격 포기를 주요 내용으로 설정한다. 한편 4자회담의 긴장완화 분과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의 후방배치 및 단계적 감축계획 등을 검토하며, 아울러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축소·조정도 실시한다. 그리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다. 또한 북·미간 영사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통상관계 증진 및 상대방 국가에서의 자국민 보호체제를 수립하고, 나아가 무역대표부를 상호 설치한다. 한편 북·일간에 있어서도 중군위안부 피해보상, 일제 식민지배 사과 및 피해보상 그리고 무역대표부 개설 등 관계개선을 진행시킨다.

둘째,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수출을 포기하고, 테러방지 국제협정에 가입하며, 마약 및 위폐 등 국제범죄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MTCR, CWC, BWT 등에 가입하도록 한다.

셋째, 한국은 대4강 정상외교를 본격 가동하며, 「한·중 불가침협정」을 체결한다. 지난 '98년 이후 김대중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햇볕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주변 4강의 지지를 확보하였는 바, 정상외교를 보다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적극적 평화」체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先 남·북·중 3국 정상회담과 남·북·미 3국 정상회담 병행 추진, 後 남·북·미·중 4국 정상회담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북·미불가침협정과 동시병행적으로 한·중불가침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한·중불가침협정은 북·미불가침협정에 대해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북·중 군사동맹의 성격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국을 활용, 남북한의 군사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이

를 위해 군비통제, 주한미군의 역할 등에 대해서 중국의 이해를 촉구하며, 한국의 군사훈련에 중국과 북한 및 주변국 군인사를 초청하도록 한다.

<남북한관계 수준>

첫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 과정에서 미·중 정상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청산과 평화공존·평화통일 원칙의 합의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등을 논의하고, 이를 반영한 「남북평화선언」²²⁾을 채택한다. 이후 남북한은 청와대 - 주석공간 핫라인을 설치하여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둘째,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가운데 실현가능한 방안을 선택하여 일괄추진하도록 한다. 군사당국자간 핫라인설치, 한미합동군사훈련 공동참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배치제한지역 설정, 후방배치 장비 및 부대의 우선 감축, 무기감축과 병력감축의 동시추진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셋째, 북한의 군비통제 소요 비용 중 일부를 우리가 지원한다. 병력 재배치 및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비용을 경협차관방식으로 지원하고, 병력감축 인원의 고용을 위해 남북경협사업 추진하며, 군수산업의 민간기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넷째, 대규모 경협차관을 북한에게 제공한다.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SOC를 투자할 필요

22) 「남북평화선언」은 영토문제, 전범처벌, 전후 배상문제를 규정하는 전형적인 평화조약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며 남북간의 '기본관계를 정상화하는 평화조약'이 되어야 한다.

가 있다. 그리고 경협차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투자보장 및 이 중과세와 관련된 당국간 협정 체결 등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

<국내적 수준>

남한의 경우 첫째,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둘째,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

셋째, 한총련 및 범민련의 활동을 보장한다.

북한의 경우 첫째, 대남 침투활동을 중지한다.

둘째, 미송환 국군포로 및 납북인사를 송환한다.

셋째, 주민탄압 중지 등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한다.

3단계: 북·미 및 북·일 수교와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지향

가. 목표

이 시기 안보분야의 목표는 한반도평화체제 전환 및 국제적 보장에 의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비안보분야의 목표는 북·미 및 북·일 수교에 의해 북한체제를 국제적으로 승인·보장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나. 포괄적 해결방안

수 준	포괄적 조치
국제	북·미수교, 북·일수교, 미·북우호·협력조약, 북한에 최혜국대우 부여,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보장, 한·미동맹의 지역안보협력 지향
남북한 관계	기본합의서의 전면 이행, 「민족공동체 헌장」체결, 서울·평양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정상회담 및 국회회담 정례화, 본격적 군비축소
국내 (남한)	평화교육 실시, 첨단 군사장비 반입중지, 방송교류 실시
국내 (북한)	대량살상무기개발 완전 포기, 전방배치 기습능력 후방 배치

<국제적 수준>

첫째, 북·미 수교를 추진한다. 그리고 북·미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전면해제 하고, 동시에 북한에 대해 최혜국대우(MFN)를 적용하여 북한 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둘째, 북·일수교를 병행 추진한다. 일본은 대북보상금을 제공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대북투자를 추진한다.

셋째, 남·북한·미·중 4국에 의한 「한반도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출범시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 경우 유엔사는 협의 하에 해체토록 한다.²³⁾

넷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국제적 보장방안을 마련한다. 즉 동북아 6자회담이나 동북아안보협력체제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보장방안을 강구한다.

다섯째, 한·미동맹을 지역안보협력으로 전환시키도록 한다. 북한의 대남위협이 감소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된 상황에서, 대북역지를 주목적으로 했던 한·미동맹체제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역안보레짐으로 전환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운데 한·미동맹의 대상, 운용방식, 주한미군의 지위 및 역할의 재조정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

<남북한관계 수준>

첫째, 남북한은 분야별 공동위의 전면 가동과 각종 협정 체결·이행을 통해 「기본합의서」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여 공존·협력체제를 정착하도록 노력한다.

둘째, 남북한간에 「민족공동체 헌장」을 체결하여 「남북연합」 또는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단계로 진입하도록 노력한다.

셋째, 서울·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

넷째, 남북 정상회담 및 국회회담을 정례화한다.

다섯째, 본격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및 군비축소를 실시한다.

<국내적 수준>

남한의 경우 첫째 공존·공영과 평화 지향적인 평화교육을 실시한

23) 단 주한미군 문제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 유엔군은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의거하여 파한되었으나,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주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규륜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9), p. 147.

다.

둘째, 첨단 군사장비 반입을 중지한다.

셋째, 남북 방송교류를 실시한다.

북한의 경우, 첫째,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완전 포기한다.

둘째, 전방배치 기습공격능력을 후방 배치한다.

< 토 론 >

김동성: 중앙대학교의 김동성입니다. 저는 길정우 박사님의 논문과 허문영 박사님의 논문이 연결된 것이라고 보고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우선 지적할 것은 냉전구조의 해체를 정책 혹은 해체 방안이라고 하면 일반정책,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고 있는 대북정책, 통일정책, 그 현안정책, 군사정책, 외교정책 등의 전반적인 것과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전략적 차원에서 그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드러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냉전구조의 해체라는 주제로 전략을 세워서 하나의 정책 체계를 만들려면 그것에 맞는 문제 의식과 목적과 전략체계를 아주 면밀하고 명백하게 내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일반정책과의 차별성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연구를 지속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길정우 박사께서는 이 냉전구조의 해체 정책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주체성,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Initiative)을 가지자고 생각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단기 정책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한반도 안정과 통일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나가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정우 박사께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역과 나갈 수 없는 현실적 영역을 발표때 보다도 이 논문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문제는 '냉전구조'와 '냉전체제'의 사이에 의미상의 불투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냉전구조라는 것은 냉전체제를 형성하는 구조적 배열 상태를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대통령께서 얘기 하실때에는 냉전체제라는 것 같고 또 조금 있으니까 냉전구

조라고 나온 것 같은데 개념 정의가 아직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냉전구조나 냉전체제가 문제가 됩니다. 냉전구조를 해소 한다는 것이 우리의 토론과 연구의 목표라고 할 때, 허문영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왜 냉전구조가 문제가 되느냐, 왜 지금까지 문제가 되느냐 하는것에서부터 시작 해서 이를 분명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또 국제적인 냉전구조와 한반도의 냉전구조·냉전체제라는 것은 성격상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한반도의 냉전체제에 대해서는 별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냉전도 전쟁입니다. 그러나 열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국제적인 냉전구조를 구성했던 구조적 틀들이 지금은 미·소간의 군사적 문제, 군사력 대립문제, 국제정치에서 미·소를 중심으로한 집단적인 동서의 대립문제들이 해소되었습니다. 미국측 입장에서 봤을때 한반도의 문제는 냉전체제의 전체틀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 골치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골치거리를 신 질서의 형성과 진화과정 속에서의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제적인 냉전체제와 한반도의 냉전 체제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단 냉전구조 차원에서, 그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맞추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냉전구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가지 대립입니다. 첫째는 이념적 대립입니다. 이는 한반도 냉전체제, 냉전구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있고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더욱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대립환경입니다. 군사적인 문제 이것은 남북간의 군사적인 대립이 일차적인데, 문제는 남북간의 군사적 대립은 우리나라와 북한관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미간의 군사적인 대립사이에서 우리가 고초를 겪는 것입니다. 그 다

음에 한 측면에서는 한·미관계입니다. 한·미 동맹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미·일동맹 체계입니다. 이러한 군사적인 문제가 결국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주 대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가 결국은 주변국들 간의 관계양식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 중국관계, 북한과 미국관계 또 일본과 북한관계, 일본과 중국관계 이러한 것들이 냉전구조를 형성하고있는 틀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시키자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을 변경시키자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현안문제하고 관련되는 특징적인 것 몇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현 정부 대북정책의 첫번째는 국제적으로 경제 지원을 북한에 제공, 북한이 생존 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두번째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체계가 갖추어졌을때, 즉 북한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을때, 이때 결국은 남북한의 화해가 이루어 지는 것이고 통일을 향한 길이 닦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로 나누어서 보는데 지금 현실은 당장의 금창리 문제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개발 문제입니다. 이것이 당장 눈앞에 떨어진 문제인데 미국의 정책은 모든 것을 일단은 이 단기적인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지금 총체적인 틀 속에서의 냉전구조 혹은 냉전체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구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문서상으로는 둘 다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했을 때 부담이 생깁니다. 미국에서는 단기적인 것을 해결해야 나중에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이번에 금창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원은 한국이 맡고, 즉 경제적인 부담을 한국이 맡아서 하고, 미국은 협상만 성공을 시키겠다고 할 경우에 제네바합의처럼 우리는 부담만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 한

반도 냉전구조 해소의 문제에 대한 냉전해소 정책이라는 것이 그러한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 말고, 새로운 각도로 해보자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구조하고 관련되어, 허문영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변4국 모두가 현상유지(status quo)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관련되어 현상을 유지하는 것과 냉전을 해소하는 것은 서로 모순이 됩니다. 냉전체제가 지속되면서도 현상이 유지된 사례는, 흐르시초프의 평화공존 선언 등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에서의 군사 동맹관계에 대한 군사적 전략이 앞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다듬어져야만 냉전구조의 해소 방안은 성공할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웅: 허문영 박사님께서 아주 많은 자료와 통계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아주 성실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학술적으로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저널리즘 시각에서 몇가지 대안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에드가 모랭이나 영국의 홉스봄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은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시점을 냉전 이데올로기의 종언 또는 20세기의 종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는 여전히 20세기 중반에 형성된 냉전체제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고 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허박사의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분단이후의 출생자가 남한에서는 전체인구의 83%고 북한에서는 87%일 정도로 절대다수가 분단체제 이후에 출생한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냉전의 질곡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부끄러운 민족적 통한사라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남한은 IMF체제로 해서 200만에 가까운 실업자, 북한은 300만의 아사자라는 경제위기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어린이 10명 중 6명은 발육부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문제이면서 국제문제이기도 한, 이중성을 가지는 남북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1960년대에서 1970년 초반까지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열세였습니다. 또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실패하면서 주한미군 일개 사단을 감축했고,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 동아시아에 미국 군사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적인 안위가 큰위험에 처해있을 때에 민족의 국가자존을 위해서 원자무기와 미사일 생산 계획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오늘날 북한이 자위를 위해서 핵이나 미사일을 준비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는 용납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역지사지의 자세로 남북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또 만약 우리의 우방이고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이 망하고 대신 북한의 동맹인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남한의 위치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고 어떠한 선택을 하겠는가라고 가정해 볼 때, 우리는 민족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항상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출발을 해야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허박사의 논문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군축문제가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시키는 방법중에 하나로 물론 허박사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소위 일괄타결(포괄협상, Package deal)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기본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남북 평화선언과 민족 공동체선언 그리고 청와대와 주석궁의 직통전화(Hot Line) 가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러면 서도 다른 이상적인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 냉전체제 해체를 위한 방안이 대부분 정치사회학적인 또는 국제정치학적인 문제에 중점을 가지다 보니 문화적인 측면 또는 한민족의 동질성의 회복을 위한 방안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컨대 비정치적인 동질성 유지를 위해서는, 항일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애국지사들의 유해 공동발굴이나 공동참배, 또 식민지 시대의 공동연구 또는 역사공동 기술, 남북한이 함께 가장 존경하는 근·현대사회의 인물에 대한 공동연구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통일연구원에서 사회문화 분야에도 여러 가지 제안과 연구를 하면 국제 정치 차원의 다소 추상적인 연구 뿐만아니라 실용주의적인 차원의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괄협상의 일환으로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과 일본 또는 우리의 우방국가들이 북한하고 수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국과 중국이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북한이 일본과 수교하게 되면,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50억 달러 내지 100억 달러 정도의 그런 식민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북한은 경제적인 곤궁으로부터 벗어나서 상당히 발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더 광범위하면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접근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KEDO에 10%를 담당하는 것도 아직은 움직임이 미약한 것 같고, 미국이 연 50만톤을 제공하기로 한 중유공급도 중단 되어 있고, 또 미국이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정해서 상당한 경제 제재 조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치의 여러 가지 장애를 일괄타결 방식으로 풀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금강리 의혹시설 또는 미사일 등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구도가 마련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섭: 서울대학교의 박상섭입니다. 허문영 박사의 글은 재미있고 잘 정리가 잘 되었으며 배운 바도 많았습니다만 현실에 비해 논문이 너무 매끄러워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남북한의 관계의 문제점과 거리가감 때문에 조금 당혹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보다는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강목사님께서 기초연설을 하시면서 보수와 진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강경하나 온건하나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보수와 진보가 있고 보수의 눈이 무서워서 적극적인 정책을 취할 수가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강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보수적인 입장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남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윤리적인 태도, 도덕적인 태도, 감상적인 태도가 배제되지 않는 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게 되면 해결하는 방안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제로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대북 화해정책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다만 그것이 단선적으로만 전개된다면, 다른 말로 하면 만약 다른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경우에 생기는 국민 전체의 좌절감 같은 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보상 할 수 있을지 염두에 두고서 시작해야 되겠다는 우려를 허문영 박사님 논문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목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으로 하였고, 이를 국제 수준, 남북한 수준, 국내 수준식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만 논문 전반에서 저는 '북한이 태도를 못 바꾸는 것이 냉전구조 때문이다'라는 식의 접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북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냉전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문제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냉전구조를 깨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즉 현재 남북한 관계 수준에서 냉전구조가 바뀌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북한의 태도인데,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이 냉전구조를 해체하자고 설정 한다면 영원히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 문제 설정을 조금 바꿔야겠습니다. 저는 감상적인 접근 방법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대북 유화책을 가만히 보면서 과거 시절의 정책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거울(mirror)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습은 정반대이지만 가지고 있는 허구성이나 약점이 역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학 이론의 정치 권력의 속성에 관한 논의가, 그리고 이러한 이론에서 제시되는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예외일 것이

라는 발상을 하고 있는지 가끔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이렇게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문제를 저는 바로 북한이 쌓아온 정치체제·정치권력의 속성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에 제가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비 협조적인 태도의 변화가 물론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개선되고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질적인 것과는 연결되지 않고 일정한 선에서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제와 남한 그리고 일본 등으로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 정권은 대단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인 냉전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북한을 후원해 줄 중국과 소련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상당히 걱정이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의 보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리적인 단위로서 북한이 아니라, 북한이 50년동안 구축해온 독특한 정치 권력구조이며, 저는 분명히 북한체제가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이 지금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는 대량 살상무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을 계속 궁지에 몰아라 하는 논의는 아닙니다. 북한을 도와야합니다. 북한이 불 때 돕는다는 것이 자본주의 세계를 퍼트려서 그들을 안으로 굶아서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갖게하는 정책이고, 이러한 정책을 우리가 계속 추진한다고 한다면 북한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분명히 자신의 체제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선에는 계속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슈미트 수상 식의 발상에 대해서는 아마 대단히 불쾌한 것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동독이 붕괴하는 것도 보았고 여러 나라가 붕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독으로부터 통일의 교훈을 얻는다고 하겠지만, 북한은 동독으로부터 교훈을 더 절실하게 얻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조금 순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저는 이 정책은 이중적인 정세판단에 따라 동시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박사님의 논문을 보면 과거 정부가 은밀한 비상계획을 세워가지고 북한의 의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은밀한 계획은 항상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악의적인 계획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비상사태를 우리가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화해정책이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이를 위해서 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하며, 만일 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가 있다고 하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게을리하는 정부입니다. 물론 이런 대비책이 겉으로 드러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수준의 냉전구조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쟁 경험은 사실상 남북한 대립밖에 없습니다. 남북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감정적 대립이 되었기 때문에 군사 문제를 가지고, 단순히 감정을 제외한 힘의 대립으로 볼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와 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

부의 주장과 동시에 북한하고 화해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의가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졌을 때 이를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서울 시내에서 우리가 북한과 화해해야 된다고 하면서 강원도 군부대에서는 북한은 역시 주적이라고 하는 혼란이 있습니다. 이는 군대에 있어서 군기문제, 사기문제하고 집결되어있는 문제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력도발 불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할 때, 냉전구조를 일방적으로 해소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첫번째 전제하고 상충될 경우에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안을 살펴 보면 북한은 상당부분 그렇지 않은데 우리만 그렇기 때문에 냉전구조가 유지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저는 허박사가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모르는 사람이 글만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정: 저는 지난 10년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에서 남북관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오면서 가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남북 기독교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것은 제네바 근방의 글리온에서 열린 1991년 회의에서였으며 그 후 워싱턴, 뉴욕, 독일, 헝가리 등지에서 지금까지 남북기독교 대표자들과 함께 통일문제를 논의한 것이 직접적으로 한 6~7차례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5월말에는 평양에 가서 직접 현장도 보고 또 북한 조선기독교연맹의 교회현장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두분 박사님의 좋은 논문을 접하면서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허문영 박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는데 저는 우선 이렇게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까지 대북 관계에서 또는 통일정책에 가장 큰 문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조급한 정치적 목표와 수단이 너무 앞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정치적 안정과 목적에 의해 소위 대북정책이 때로는 굴절되고 때로는 이용되어 온 점이 충분히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국제적 상관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는 남북관계 즉 민족 내부적인 관계로 규정하고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려고 했으며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국민적 합의라는 문제가 늘 제기 되면서 실제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어떤 적절한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북에 관한 이야기나 통일에 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마당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 현실이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특별히 지난 1년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지켜온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힘으로 다가왔고, 이러한 사실은 결국은 우리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대북관계 통일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현재 북에서 김일성의 영원히 살아있는 주석 직위는 적어도 지금도 힘을 발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으로 하나의 신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김정일의 체제나 김일성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정

책적으로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대외관계를 해온 것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공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체제가 무너진대거나 김정일 체제가 점차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해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판단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김정일·김일성 체제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직을 맡으면서부터, 남한과 미국의 위협에 대한 안보 태세를 갖추는데 있어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 내부에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조속한 시일내에 무너진대던가 조속한 시일내에 약화되어 간대던가 또 조속한 시일내에 다른 붕괴 조짐이 일어난대던가 하는 견해를 가진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전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까 강원룡 목사님이 말씀하신 햇볕정책에 대한 그분 나름대로의 이해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저는 햇볕정책은 실제로 북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기 보다도 오히려 남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남에서 북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견해도 가지지 못한 일반 대중들 속에서 과연 북한에 대한 통일정책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서나 대통령 취임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국민적 합의에 의한 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국민적 합의에 의한 안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도출해야 할지 방법론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북을 상대하는 햇볕정책이 남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예를 들자면 국가 보안법의 개폐를 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또 나아가서 햇볕정책의 가시적인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는 비 전투력의 삭감을 통한 군비 축소 등을 이루어 낸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쪽에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보수세력에 관한 과제입니다. 아까 박상섭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실제로 남한에 있어서 보수세력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한 보수세력은 사실상 이제까지 어떤 의미에서 통일을 지원하는 세력이 아니라 통일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988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의 기본 선언」이라는 문서를 채택했을 때 거기서 내놓은 가장 큰 전제가 죄책고백이었습니다. 이 죄책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단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까지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 정책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가 가져온 반공 이데올로기 혹은 반공 이념, 분단 고착화 이념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교회가 그런 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 어찌면 통일에 가까이 나갈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으로부터 화해와 사랑의 이해 다시말하면 복을 적어도 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복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동족에 대해 충분한 사랑과 이해를 전제로 하면서 이런 문제를 내세웠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 문서가 정부로부터의 비판보다도 사실 교회내부의 보수세력으로부터의 비판이 거세었고, 이 거센 반발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상당 기간동안 용공기관이라던가 또는 혹은 반체제기관으로 낙인을 찍는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북의 무력을 막을 수 있는 길, 북의 미사일 또는 핵 문제를 정말 막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분 박사님, 특별히 허문영 박사님이 제시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특별히 허문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고려할 사항으로 일곱가지의 정리된 내용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실질적으로 북의 무력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저는 몇가지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허문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바의 마지막 관계, 국제적 협력 관계의 도모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반도에서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통일운동을 해온 것도 세계교회협의회(WCC), 미국교회협의회, 독일교회협의회 등과 힘을 합쳐서 소위 교회일치 운동의 핵심을 국제적 합의와 국제적 연관 속에서 추진해 왔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미국교회협의회가 최근에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소를 미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미국교회가 미국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그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큰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남북문제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민족적 동질성을 찾기 위해서 장기적인 대화를 만들어 내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전략적인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적, 기독교적 용어로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내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민간기관의 대폭적인 대화참여를 유도하고 이 대화의 폭을 넓히며 교류의 확대를 증진 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활용을 끊임없이 제창해왔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해낼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허문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결국 문제점이라면 허박사님도 북의 체제유지에 대한 이해가 결국 어떤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기하신 특별히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호재: 저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또는 변화가 우리나라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1년전만 해도 혹은 몇개월 전만해도 지금 길정우 박사나 허문영 박사가 발표한 이런 내용은 아마 좋게 보면은 이상주의자들의 주장이다 또 나쁘게 보면은 친북적이다 하는 비난까지 받을 수 있는 매우 소수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같은 소수 의견이 오히려 이제는 다수의 의견이 되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한편은 좋은 조짐으로도 봅니다만은 한편 염려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 두분의 논문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인 소수의견을 대표하는 것일텐데, 오랜 냉전상황 때문에 그 소수의견이 과연 국민의 지지 또 정파간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국민이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의 뿌리는 어디있을까? 냉전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에 이분들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냉전시대에 김일성 혹은 이승만 같은 분의 뿌리에 근거하는 북한을 보는 남한을 보는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면 냉전체제로 인해서 소멸되었던 우리의 중간파들입니다. 민족의 이익을 우선으로하고 이념을 극복하는, 또 우리가 어디까지나 타협을 해 불려고 하는 남북 협상파들 그러한 사람들의 뿌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냉전노선이라고 할까 김일성 이승만 노선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서 새 시대에 요구하는 어떤 중간 노선이라고 할까요. 협상 노선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뿌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국민의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쉽사리 컨센서스를 형성할 수 있는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분단사와 연결해가지고 오늘 두분이 주장하는 내용의 뿌리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 해주시면 아마 두분의 논리나 주장이 단순한 이상주의나 단순한 북한의 쫓아가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적인 새로운 어떤 시대관·민족관에 입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분의 논문을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 점이 매우 흥미있고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하는 햇볕정책이라던가 혹은 남북한이 말하는 소위 일괄타결(포괄적협상) 정책들이 단순히 하나의 정책의 수정 혹은 정책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 문제를 보는 근본적인 시각 및 입장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군사문제에 치중하고 단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구조 즉 냉전구조를 해체함으로써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극단으로 말하면, 핵문제, 군사문제 그것에 너무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냉전구조를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한 정책수준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50년간 우리가 부정해왔던 냉전구조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 시각을 가지고 출발해 보자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 우리가 핵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분단 이래에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지금 두 분이 내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시도를, 주도권을 우리가 갖자하는 것이 논문의 기초라서 역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길정우 박사의 논문에서 잘 지적된 것 처럼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의 대북한 화해 정책이 이렇게 야심적이지만 현실적으로 핵문제 먼저 해결, 군사문제 먼저 해결하자고 하는 미국과 일본같은 나라의 정책 요구와 조화하

기가 과연 그렇게 쉬운 것인지 우려됩니다. 이 조율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두분의 논문의 기초인 낙관론을 우리가 낙관론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이 우리의 화해정책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강성대국으로 대응할 때 우리가 여기에 대응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합리적으로는 강성대국 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호응했으면 좋겠습니다만 50년간의 냉전과 북한 정권의 성격으로 보아 이런 정책이 호응을 얻지 못했을 때가 우려됩니다.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구상을 이렇게 전부 카드를 펴 놓는 것이 대북한, 대열강과의 외교에 있어서 과연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좀 숨겨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해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기한다는 카드를 제네바 북·미합의에 내어놓았듯이 말입니다. 미국이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과 미국에게 북한과 빨리 수교하는 것이 한반도 냉전체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요구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마치 서두르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동시에 UN에 가입하고 북방외교를 하면서 4강의 남북교차 승인을 우리 한반도 평화 체제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불가피 합니다. 또 그것은 현실로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상대로,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이 카드를 먼저 내어 놓고 안달을 하는 입장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금창리 핵 의혹 시설이나 미사일 핵 개발 포기는 두분이 여기서 북한의 핵 전략을 이야기 할 때 생존전략이라고 한 것 처럼 그들의 정권 유지에 기본이 되어있는데 교차승인이나 경제 협력같은 것을 준다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당장 여기에 대해 확실한 보증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못 얻으면서 내어 놓을 것만 다 내어 놓는 상황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핵 문제, 군사문제, 미사일문제를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협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그것은 저에게 부정적입니다.

길정우 박사님의 논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논문을 보면 우리가 북한관계에서 새로운 햇볕정책, 포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부적인 제약 외부 세력간의 갈등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외부적인 갈등과 제약 보다는 국내적인 제약 및 갈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 초기에 한완상 통일원 장관을 비롯해서 상당한 정도로 화해정책 햇볕정책을 추구하다가 국내정치에 의해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국내 여론에 냉전을 타파하려는 과감한 혁명적인 노선에 대해 컨센서스가 형성되어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것에 대한 철학, 논리, 현실성 이런 것을 얼마나 홍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아직도 상당히 이 문제에 관해서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이 아직도 소수파인 것이 아닌가. 마치 현 정권이 소수파정권이라고 비판받는 것 처럼 대북정책도 이 햇볕정책이 소수파의 견해를 대변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두번째 제가 또하나 묻고 싶은 것은 만약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한다면 정치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이고 설사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하더라도 야당은 혹은 반대 세력은 이를 쉽게 쫓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통일정책과 한국정치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여론의 동의를 얻고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소위 포용정책·화해정책이 국민의 동의를 얻고 온 국민이 같이 추구하는 그런 정책이 되려면 초당적인 그런 정책이 되어야겠는데, 그야말로 보수라고 표현된 그런 여러 세력들의 요구 특히 구체적으로 야당과 이 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현정부가 성공하면 야당은 굉장히 불리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이 있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 강: 길정우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길박사님이 포괄적 접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평가하시고, 다층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안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모든 것이 결론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3월 8일 페리가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대북정책에 관련해서 한국정부와 협의를 하고 같겠지만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은,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현재 이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한국은 장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현안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이견이며, 그것이 한·미간에 불편한 관계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일본과도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가정한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포괄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미국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포괄방안이 동일한가를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 있어서 혹시 길정우 박사님께서 미국측의 한국에 대한 의도나 정책방향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좀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외부에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비를 안하고 있다면지 단기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미 동맹이라던가 미·일, 한·미 삼

국간에 걸쳐서 계속 현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현안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겠다는 점이며 그렇기 때문에, 장기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내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50년동안 쌓아왔던 내성이라던가 체제의 결속을 단기간내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천천히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보다 실천적인 의미에서 정부는 대략 5가지를 말합니다. 기본합의서 이행을 통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관계의 구축, 관계국간의 불평등 관계 해소,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대한 고립을 탈피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현안과 관련된 문제로서, 대량 살상무기 해체와 남북무력 대결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비통제를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사실상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 공존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가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 경협을 확대한다든지 교류협력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쪽에서 화해와 협력쪽의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자기가 평상시에 강조하고 있는 안보문제를 현 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도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사실 작년 잠수정 침투라던가 간첩선 침투사건 이후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고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받는 비판 하나가 북한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변화를 계속 할 수 있을것인가. 길정우 박사님께서서는 부정적이라고 하지만은 부정적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둘것인가.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에 보고서에 ‘자비로운 무관심(Binign neglect)정책’이 포함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자비로운 무관심 정책을 취할 때 북한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합니다. 자비로운 무관심을 정책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북한이 과연 무시당할 것인가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우리를 계속 괴롭힐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보 태세를 강화해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주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저희가 북한의 조기 붕괴라던가 내부문제 이런 것이 자꾸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비상사태계획(Contingency plan)’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이 협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합의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정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와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한 평가라던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가,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은 일치하고 있지만 어떻게 거기까지 같 것인가 하는 면에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간에도 있을 수 있겠죠. 대개 그렇지만 과거와는 달리 한·미동

맹이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 서로 그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좀더 정부측에 제시해주실 만한 그런 도움 말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하의혹 시설 또는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한-미간에 이견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지만은 그건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떠한 면에서는 타결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사일은 미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타결 문제를 위해서도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한 포괄적 타결방안도 우리가 한번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에서 대량 살상무기 문제를 남북간에 협의하는지 관련국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제네바 합의라던가 또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도 고려해야 될 것에 대해 길박사님께서 타당히 지적하셨습니다. 비용 분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비용분담을 해야하는가. 또한 비용분담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납득을 할 수 있는 가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국민적 지지기반이야 말로 사실상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근본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초당적인 차원에서 그런 협조와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 좀더 활성화가 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안해결에 무심하다거나 현안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 해결 노력을 계속 경주하면서, 장기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라는 목표가 달성될 때 사실상 우리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괄적 접근 자체가 단기간내에 성과가 나타나고 만족할 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보아야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도전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도전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잘 극복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북한이 변화하느냐 안하느냐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사실 부분적이거나 북한이 조금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좀 더 증대해 나가면서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현기(전 주스웨덴대사):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의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의 관심사이며, 목표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동시에 우리 민족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냉전구조 해체가 지금 기술되어 있는 이런 방안으로 나아가게 될 때 자칫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의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국제화로의 확대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주변국가들은 사실은 각자 처해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반도가 조용하게 안정되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안정을 원하는 것이 결국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그런 정책으로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냉전 구조 해체가 하나의 중간단계이고 그것이 통일을 위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화의 확대 결과가 자연히 주변국가들의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현상유지정책으로 나가게 되면 자연히 통일과는 다른 경향을 띄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고 연결을 잘 지어 주어야 이 냉전구조 해체와 그에 따르는 방안이 우리에게 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로서 대두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둘째는 아까 최강박사께서 첫번째 지적하신 점입니다. 우리 냉전구조 해체 그리고 포괄적 접근방식, 일괄타결 방식이 한·미공조 속에서 잘 진행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연설을 통해서 북·미간에 관계개선은 금창리 문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 하나만 봐도 미국은 단기적인 것을, 우리는 중장기적인 더 먼 곳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혹시 의견차이가 있는지, 한·미 공조 차원에서 혹시 길정우 박사님이 관찰하시고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초당적인 접근이 대단히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당연한 말씀이며, 거기다가 저는 한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이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도록 대북정책은 어디까지나 국민적인 합의를 가지고 추진해야 우리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따른 그러한 방안, 포괄적인 접근 방식 일괄타결 등이 보다 큰 무게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만(통일교육전문위원): 저는 두가지 이의를 제기해 볼까 합니다. 그 한가지는 범민련과 한총련을 현실화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1996년으로 기억이 되지만 한총련 대표로 북한에 파견한 학생이

평양의 대중 집회때 고려연방제를 성사 시키기 위해서 적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하겠다고 표현하는 등, 대한민국을 적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총련과 범민련을 대법원의 판례에서 불법 단체로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총련과 범민련 등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겠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작전 지휘권 환수문제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디까지나 목표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20~30년후의 문제이지 지금 당장 작전지휘권을 한국에 준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행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쟁은 과학전쟁이요, 정보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의 95%는 탈북자, 그리고 동북삼성에 있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 기타 신문·라디오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보의 시그널 인포메이션에 대한 것은 99%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한 것은 98%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언젠가는 받아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GNP가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갔을 때 30년 후에나 가능한 문제이지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답변 >

길정우: 페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론 제가 접촉하는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워싱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몇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리가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든다고 하지만 새롭다는 것은 의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쓰는 말이고 사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북한을 다룰 수 있는 해법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당근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이미 북한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페리 보고서에서 강조 하려는 것은, 소위 채찍으로 무엇을 새로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달라지면 달라질까 주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지난 몇 년동안 다 알려졌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정부의 입장 또 미국의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리고 94년 북·미 기본합의의 틀을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다, 이 세가지 를 고려하면서 보고서를 만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페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좋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만 잘 갖추면 고비는 넘길 것이라고 봅니다. 고비를 넘긴다는 것은 올해 배정된 대북관계 지원예산, 중유, KEDO 예산 정도를 올해 넘기고 나면 올해 말부터 미국은 대선으로 진입하므로 북한은 기억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의회와 행정부간에 타협을 하고 넘기자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쬐이면 문제가 조금 심각해 질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북한의 대응태도에 따라서 좀더 의회가 행정부를 압박한 다든가 하는 상황이 있겠지만 의회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중단이 되고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다만 페리의 관심사항중에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북관계에서 북한이 의제를 만들어 놓고 미국이나 한국이 항상 거기에 대응을 하는 이 패턴을 끊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볼때에는 가장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포괄 협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생각하고 미국도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테이블 위에다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꾸려 왔으니까 내어놓고 이것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르든지 미안하지만 못받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우리도 조금 너희들하고 떨어져야 되겠다 그 대목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과거와 달라진 것입니다. 무엇을 줄것이나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북한이 안받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은 재처리시설 가동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미국의 내심 드러나는 것은 1994년 북·미기본 합의때와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한 개에서 두 개 핵탄두 많아야 여섯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이미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정보 보고를 기초로 해서 더이상 만들지 않도록 동결시키는 것이 북·미 기본합의의 요체입니다. 지금 달라진 것은 대여섯개 만들어 본들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미국의 변화입니다. 하나라도 더 만들면 마치 동북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처럼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던 미국이 4년동안 북한을 다루어 본 결과 도달한 태도변화는 미국은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시하는 동안에 시간을 버는 것은 미안하지만 여전히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완전히 문 닫아 걸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은 최소한으로 할 것입니다. 물론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그럽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유 제공은 안합니다. 그러면 그 부담이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국이 나서서 대북포용정책 하면서 식량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은 북한쪽에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이 밖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내심입니다. 너희들이 그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미국본토가 위협이 안되면 너희들은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주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미국이 절대 말을 안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페리 보고서 밑에 깔린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점입니다. 미국이 우리 생각대로 북·미 수교해주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미국과 정면 승부를 하면서 ‘너희들 그러면 빠져라 우리가 알아서 책임진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북·미 수교문제를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에 북·미 수교는 미국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한국이 왜 북·미수교를 자꾸만 들고 나오느냐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을 잘몰라서 그러느냐는 반응입니다. 의회도 있고 전문가들도 이익집단들도 있는데 마피아 같은 집단하고 어떻게 당장 국교정상화를 하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만 우리가 강조를 하면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정부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설명할 때 다만 우리정부에 대해서 하나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왔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로서 그 정책에 무게를 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꾸 개입했던곳에 대해서는 한국에 가급적 무게를 실어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최강박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의 햇별

정책을 보는데 대해서 미국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되는 것은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장래로 보고 있는 것은 연착륙이며, 북한이 갑자기 주저앉거나 무슨 도발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사태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정부가 생각하듯이 평화공존으로 가서 통일은 그때가서 보자라는 논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훨씬 많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은 걸핏하면 미국정부가 한국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나오는데, 미국이 왜 지지하는지를 알고 이해를 해야됩니다. 한마디로 보면 미국인들이 보는 우리의 대북정책은 한국이 지나치게 자신감에 넘쳐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자신있다고 봐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실속있는 자신감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 시킬 수 있나라는 문제는 박상섭 교수님이 다른 분한테 질문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포기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1994년 기본합의를 만들 때 제가 통일부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국정부는 준비할 것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상대하는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년뒤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 생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햇볕정책조차도 소위 '독당근(Poison carrot)'을 먹여서 서서히 죽이려는 정책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말이죠. 상당히 아이러니컬 합니다.

이호재 교수님께서 저의 생각의 뿌리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무슨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역사의식에서 글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놓여있는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체제의 내구성을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 보다는 질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보다 절실하게 느끼게 했다는 동기라고 봅니다. 좀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최고 통치권자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한국의 현실에서 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미국 스스로가 북한문제를 미국의 힘으로는 풀 수 없다고 스스로의 반성을 하고 있는 분위기도 우리가 이 거창한 문제를 다루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의 외교적 카드를 너무 펼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외교적인 카드라는 것은 제가 아까 발표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남북간의 비밀접촉 창구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우리가 남북간의 대화를 할때 주변국들이 한국의 일거수 일투족에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외교적 지렛대는 비밀창구든 공개창구든 남북간에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문영: 저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통일이 과연 우리의 목표인가. 김정일 정권하고 통일을 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그럼 통일은 목표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흡수통일을 해서라도 무력통일을 해서라도 해야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무너뜨리면 과연 무너지는가 중국이 이를 방관하는가. 김정일은 죽기 살기로 한번 안하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저는 지금 우리의 목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저는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평화를 깨느냐, 북한이 깨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평화를 깨고 있는가에 대해 두가지 목표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북한의 헌법과 당 규약에서 보듯이 하나는 적화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체제유지입니다. 그리고 적화통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것은 역시 우리가 힘으로 막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그것은 교류협력·화해협력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안보와 화해협력의 두 궤도전략을 김대중 정부가 선택하고 있는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대해서 저는 보수, 진보로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이재정 총장님, 또 김삼웅 주필님. 저는 강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박상섭 교수님, 청중 중에서 지적해 주신 교육위원님의 지적 등 좋은 지적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합의를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섭 교수님께서 화해방안을 긍정적으로 참 좋게 보았으나,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대비책을 말하지 못했느냐면, 한입으로 두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평화와 화해를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셔야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책도 통일부가 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의 분단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무장합대가 들어오는 것을 다 잡아야 됩니다. 또 우리 국가정보원은 간첩들을 다 잡아야 됩니다. 통일부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

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통일부에서 간첩잡자고 하면 국가정보원이 할 일이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남북대화에서 평화적으로 하자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 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방부가 우리는 무력은 관계없으니 우리 평화적으로 하자, 대화만 하자고 한다면, 그것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민무력부는 계속해서 무력통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호청사는 계속해서 간첩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조평통은 위장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역할을 감당하는 노력들을 자기 부처마다 성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총장님께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국제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변국가와의 관계에서 것은 통일은 현상 타파고,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워도, 주변국가도 한반도의 평화는 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주변국가와 공존해 가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를 모두 보여준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는 강아지와 고양이 관계같은 이런 관계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화해를 못하는 이유는 서로가 갖고 있는 신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호간에 학습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북·미, 북·일 수교는 당장하자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많은 과정들이 거두절미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카드를 벌여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통일교육 전문위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한층

련, 범민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기를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시면 한총련, 범민련 쪽에서도 지금 우리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작전지휘권 환수문제도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문제제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주의적 입장인 분들은 이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십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보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작전 통제권을 환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그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다른 문제제기를 해놓으면 현실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께서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맥락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한번 더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1차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현실주의적 입장과 온건적인 입장이 회의를 같이 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제 논문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부족하지만 다소 두서없는 답변이지만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일정

13:30~14:00 등 록

14:00~14:20 개회식

- 축 사: 강원룡(통일고문회의 의장)
- 인 사: 양영식(통일연구원 원장)
- 사 회: 조 민(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14:20~17:30 주 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장기·포괄적 접근전략”

- 사회: 임용순(성균관대학교 교수)
- 발표: 길정우(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겸 칼럼니스트)
허문영(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
- 토론: 김동성(중앙대학교 교수)
김삼웅(대한매일 주필)
박상섭(서울대학교 교수)
이재정(성공회대학교 총장)
이호재(고려대학교 교수)
최 강(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기획부장)

17:30~19:00 만찬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 김영춘 신상진외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현 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김병로 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체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이교덕	저	4,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옥 정영태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공저	발간예정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손기용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흙 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헌경 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외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외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의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9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의공저	\$9.90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 Translation Series

-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를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을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1998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근 무 처			
	직 위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절 취 선